

<통일논문 부문 최우수상>

상징으로서의 통일의 실재화(hypostatization)를 통한 통일
친화적 사회 구현방안에 대한 제언
-사회적 상호작용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김진원
고려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신오철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상호작용이론
2. 실재의 사회적 구성

III. 통일세대 의식 조사 분석

1. 조사설계
2. 통일세대 의식 조사 결과

IV. 상징화를 통한 통일 친화적 사회 구현 방안

1. 통일교육 측면 : 북한학의 대학교양화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 강화

V. 결 론

I. 서론

분단 이후 한반도의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자 헌법에 명시된 국가적 지상과제였다. 하지만 지난 60여 년 동안 남북한 모두 통일이라는 명제의 일정부분, 혹은 전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음은 부정할 수 없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남북 간 체제경쟁 및 이념경쟁의 압박에서 벗어난 탈냉전 시기에 들어와서도 통일이라는 명제가 국내 정치이념 및 노선 갈등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여야 정치세력과 각급 사회단체들 간의 정치적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대외관계에서는 자주와 동맹의 이분법적 균열이 소위 ‘남남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전면화 된 상황이다.¹⁾ 이러한 상황은 통일과 안보라는 대승적 명제를 정치화 하여 이들 명제를 둘러싼 정치세력 및 각급 사회단체들의 투쟁과 국론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세력들은 각자 자신의 이념적 방향 혹은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름대로의 ‘통일관’과 ‘안보관’을 정의하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의 당위성과 방향성에 대한 진정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분단 상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통일의지 약화 경향과 더불어 통일을 둘러싼 전쟁과 갈등, 분열을 보며 혹은 직접 겪으며 자란 현재의 10대, 20대, 즉 가까운 미래에 조국 통일과 통일조국을 이끌어갈 중추세력인 ‘통일세대’들이 통일이라는 명제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의 당위성과 방향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는 비록 단시간 내에 명시적, 선언적으로 제시되기는 어렵겠지만 헌법이라는 사회계약의 틀 안에서 어느 정도 그 당위성과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탈 냉전기 이후에 출생하고 정보화 시대에서 자라나며 통일을 둘러싼 각종 이념의 충돌과 경쟁들을 온 몸으로 체감한 10, 20대의 통일세대들이 느끼는 통일이라는 명제에 대한 피로감 등 부정적인 감정과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통일담론의 접촉과 내재화는 차세대 대승적 통일담론 형성과 국민 통일의지 결집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발전되어 장차 북한의 대남도발 등 여타의 요인에 의해 통일정책 및 논의가 정체되어 있을 경우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회의로 직결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혹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거나 미약할 경우 정부의 통일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고 통일을 위한 충분한 사전대비 역시 갖추지 못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소모적인 정쟁이 지속되고 대다수의 통일세대들이 통일이라는 명제에 등을 돌리게 된다면 통일의 적기(適期)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통일을 실현해 나갈 원동력이 부족할 것이며 통일을 한 이후에도 사전대비 미비로 인한 사회혼란과 내부갈등의 심화는 자명한 일이다.

1) 홍성이, 「탈냉전시기 한국의 통일정책과 북핵문제」, 『월간 북한 통권430호』 (북한연구소, 2007), p. 121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현재 10대, 20대 통일세대들이 통일담론에 접근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징, 즉 용어(用語)로서 활용되어지는 ‘통일’, 즉 ‘통일’이란 단어가 가지는 상징성과 그 상징의 재생산 및 통일이라는 실재의 사회적 구성과정을 사회적 상호작용론의 분석틀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통일이란 단어가 가지는 사회적 상징과 그 단어를 접하였을 때 개인이 느끼는 이미지의 종합이 결국 통일세대들이 통일과 통일정책, 통일담론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가설을 입증함과 동시에 현재 10대, 20대들의 통일이라는 용어에 가지는 이미지와 통일의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분석틀과 세대와 성별을 구별하는 등 세밀한 조사설계 및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통일세대들 대부분은 초기에 형성된 통일 인식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통일에 대한 인식(Image)을 기초로 통일문제와 남북한 제반문제, 그리고 주변에서 펼쳐지는 혹은 접하는 통일담론에 대한 나름의 인식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일’이라는 실재적 개념은 온전히 개인적이 아닌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그 개념은 개인의 생애주기 중 인지능력 발달과정에서 실재에 대한 나름의 정의가 형성될 시기에 통일에 대한 담론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접하였는지가 개인의 향후 통일관 형성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긍정적 상호작용이 바탕이 된다면 기존의 통일관 역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상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상징화’ 및 실재의 사회적 구성을 통한 내재화를 통해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 및 통일의식 제고를 꾀하여 통일세대들의 관심을 통일문제로 돌리게 함과 동시에 통일세대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배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 전체의 통일의지 및 역량이 강화되어 ‘통일 친화적 사회’²⁾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 상징화를 위한 사회적 풍토조성은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가 선행된 후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 모델은 통일 친화적 사회의 구성이 통일 친화적 사회를 만드는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수단과 목적이 동일화 된 모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 상징화를 위해서는 ‘통일교육’과 ‘사회적 풍토조성’을 위한 전위대(前衛隊)적 조직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며 통일교육 부분에서는 각 대학의 필수교양 과목으로 ‘통일학’을 신설하는 방안과 사회적 풍토조성 부분에서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강화에 대한 제언을 할 것이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 상징화를 위한 여러 방안 중에서 대중에게 더욱 파급력이 있을 대중매체를 이용한 방법은 그 전달수단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일방성과 단순성, 자극성 등 부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중매체가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복잡한 문제인 통일에 대해 전 방위적으로 다루게 된다면 자칫 현재보다 더욱 편향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효과를 예상할 수 있

2) 본 논문에서는 통일 친화적 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통일 친화적 사회 :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통일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당위성과 필요성을 내재화하여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자발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사회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기 언급한 대학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공식기관의 역할 강화 및 제고를 통한 방안을 제언할 것이며 이러한 제언들은 실현가능성 있으면서도 어느 방안보다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2장에서 ‘상징으로서의 통일’을 설명하기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론’과 ‘실재로서 구성되는 통일’에 대한 설명을 위해 ‘실재의 사회적 구성이론’을 각각 설명 한 후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상호작용이론

사회적 상호작용이론은 미드(G. H. Mead)와 쿨리(Charles Horton Cooley)에 의해서 처음 비롯되어 블루머(Herbert Blumer)에 의해 1937년 명명되고 체계화된 미시사회학적 이론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론은 인간은 외부의 대상(물)에 대해 그것이 자신(본인)에 대해 갖는 의미에 근거하여 행동(반응)하며 대상이 가지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부터 생겨나 도출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성된 의미는 대상물에 맞닥뜨려 사람들이 사용하는 해석적 과정을 통해 다루어지고 수정된다.³⁾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은 단지 미시적인 상호 작용의 방식에 대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과 의미, 그리고 상호 작용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개인의 자아 개념의 형성 및 사회와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까지 포괄적이고도 일관성 있는 이론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론에 입각해 ‘통일’이라는 용어, 즉 상징이 우리사회 안에서 어떠한 의미와 위상을 가지는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개인의 자아 개념은 사회적 상호 작용의 결과로서 형성된다. 즉, 각 개인은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접하는 타인의 눈을 통해 사회화된 자아를 형성해 간다. 이 자아 형성 과정은 주체로서의 나와 객관화된 나 사이의 변증법적 상호 작용의 과정을 거치는데 개인이 ‘통일’이라는 상징에 부여하는 의미와 위상 역시 각 개인만의 작용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형성된 상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의미 역시 다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변증법적인 상호 작용의 과정을 거친다.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통일이라는 상징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그 분석틀을 형성하여 사회적으로 통일이라는 상징에게 주어진 의미를 중심으로 통일관을 정립하게 되며 상호 작용 관계에 있는 사람들, 즉 주변에서 통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예견하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일을 정의하고 행동의 한계를 설정한다. 이는 곧 자신의 성향과는 별개로 주변과 통일에 대한 어떠한 상호 작용을 하는지가 개인의 통일관이나 대북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이는 정태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再)정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이라는 상징에 대한 이미지는 곧 통일인식과 통일 의지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용어로서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상징화는 곧 사회에 소속된 개인의 통일인식과 통일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론 안에 ‘실재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각론에서 더욱 구체화 된다.

3) 앤서니 기든스, 『현대 사회학 6th Edition』, (을유문화사, 2011), pp. 230 - 241

2. 실재의 사회적 구성

사회적 상호작용이론 중에서도 개인의 인식과 사회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이론적으로 조각해 놓은 것이 실재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각론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론에 더해 이 각론을 살펴보는 것은 실재의 사회적 구성 이론을 대입시키게 되면 개인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형성된 통일이라는 상징을 통해 통일이라는 실재를 외면화 한 후에 그 상징을 실재로서 인식하고 내면화 하는 과정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내재화된 통일이라는 실재가 개인의 통일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보다 정확한 이론적 스펙트럼으로 보고자 함이며 ‘구성된 실재’의 개념을 도입한 사회현상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3장부터 제시 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만 본 논문의 연구목적 상 사회적으로 구성된 실재의 개념만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바,⁴⁾ 본 개념을 역할을 상징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의 일부로 한정하였으며 분석의 이론적 분석틀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론으로 삼았다.

실재의 사회적 구성이론의 핵심은 개인, 즉 행위자와 그들의 정체성 및 이해관계의 본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행위자는 문화적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실재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만들어지고 문화적으로 결합된 지식이 개인들로 하여금 실재를 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실재의 사회적 구성은 우리가 인식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보고, 우리 이해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며, 무엇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행동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연관된다.⁵⁾

또한 주권이나 국가의 개념, 지도자와 자본주의의 개념 등 사회적으로 약속된 개념은 원래부터(자연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개념들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이념과 제도, 궁극적으로 의도를 가진 지도자의 정치적 계산 및 인류의 개선을 시도했던 도덕적 의식을 가진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한다.⁶⁾

사회적으로 구성된 실재는 ‘구성된 실재(constructed reality)’라고 불리는데 이는 자연계에서의 존재의 유무와는 별개로 인간이 인식하는 실재로서 인간의 의식에 의해 적극적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이는 구성주의적 인식론을 취하는 현상학, 해석학, 상징적 상호작용론 등에서 규정하는 실재의 개념이며 실재하는 것은 경험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의미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만 세계를 인식하게 되므로, 여하한 직·간접의 방법을 통해서

4) ‘실재의 사회적 구성’이론 중 실재의 내면화 과정에서 1차적, 2차적 사회화 과정은 ‘상징’으로서의 통일에 중점을 두는 본 논문의 연구방향에 비추어 봤을 때 적용에 한계점이 있으나 실재의 사회적 구성이론 그 자체는 상징을 통하여 실재에 접근한 개인이 그 실재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함.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본문에 상기한 대로 상징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의 일부로 한정하였으며 이론적 분석틀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론으로 삼았다.

5) 피터 L. 버거,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nchor Books, 1967)

6) 비판사회학회(정태석 외 18명 공저), 『사회학 : 비판적 사회읽기』, (한울, 2012)

도 경험될 수 없는 것은 이미 인식 밖에 있는 것이며 인간경험에 내포된 의식의 지향성에 따라 의미가 부여된 것만이 인간에게 실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객관적 실재를 인식하지 않는다고 보며 사회는 그 사회의 실재를 구성하고, 사회의 존재는 특정한 개인의 존재보다 선행한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 태어나며, 사회에 의해 사회화되고, 그리고 문화에 의해 제시되는 실재에 대한 규정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⁷⁾

이러한 과정들의 외면화, 객관화, 내면화라는 변증법적 반복을 통해 개인은 구성된 사회적 실재를 내재화 하게 되며 이는 곧 사회화라고 표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화는 항상 특정한 사회구조의 상황 속에서 발생하기에 성공적인 사회화는 객관적 실재와 주관적 실재가 고도의 조화를 이룬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⁸⁾

이러한 관점에서 상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상징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서 개인은 상징으로서의 통일을 실재로서의 통일로 외면화 하게 되며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그 실재를 객관화 하고 내면화 할 것이다. 바람직한 통일에 대한 내면화는 개인의 통일의식의 확립과 통일의지 고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통일’ 이라는 실재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통일의식 제고와 통일의지 고취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이는 통일에 대한 준비를 넘어 통일 그 자체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다.

상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개인의 접촉면을 넓히는 노력이 다수의 개인이 실재로서의 통일을 내재화 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며 상징에 대한 접촉의 증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발히 일으키며 개인의 실재로서의 통일에 대한 내재화를 심화 시킬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는 점차 통일 친화적 사회로 재구성 될 것이며 그 사회는 다시 사회적 환경으로서 작용을 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사회적 상호작용과 실재의 재구성에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 사회는 더욱 더 통일 친화적 사회가 될 것이다. 본 분석틀을 표로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1] ‘상징으로서의 통일’ 과 ‘실재로서의 통일’ 의 사회적 작용 과정과 기대효과

대 상	사회적 작용	기대효과
‘상징’ 으로서의 통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통일인식 확산	통일에 대한 관심 (담론형성과정 참여 유발)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기반 조성
‘실재’ 로서의 통일	실재의 사회적 구성을 통한 통일의지 내면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정 통일의지 고취 통일정책의 정당성 및 지지 확보

7) Peter L. Berger ; J. Luckman, 『지식형성의 사회학(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기린원, 1989)

8) 같은 책, pp. 128 - 131

Ⅲ. 통일세대 의식 조사 분석

1. 조사 설계

국민 통일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연구결과는 다양하고 많았지만 앞서 기술했던 상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통일세대들의 인식은 선행연구가 전무하고 각종 기관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직접 통일세대들의 인식을 조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사내용은 상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통일세대들의 인식 조사이며 통일세대들이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통일에 대한 관심도와 통일 교육의 정도, 통일의 가능성, 북한에 대한 인식(대북관), 통일의 당위성과 방향성, 통일에 대한 가치 등을 다면적으로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상징으로서의 통일이 실재로서의 통일로 전환된 사례와 실재로서의 통일이 개인에게 내재화된 현상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통일 세대의 다양한 인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융통성과 객관성이 높은 설문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통일세대를 10대, 20대로 한정지어 10대인 고등학생과 20대인 대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둘 표본의 비율과 표본 내 성별의 비율도 맞추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문항 별로 전체 응답자들의 특징, 10대, 20대간의 특징, 남녀 간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통일 세대 안에서 분화 된 상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설문지의 질의문항이 상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을 최대한 감추고자 노력하였으며 이에 응답자들의 객관적인 문항에 대한 답변 안에서도 표본 집단의 통일에 관한 피상적이고 무의식적 이미지, 즉 상징으로서의 통일의 이미지를 추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설문지를 작성하여 2013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 장소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조치원여자고등학교, 세종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인원은 302명이다. 그중 고등학생(10대)은 152명, 대학생(20대)은 150명이며 남학생은 142명, 여학생은 160명이다.

[표 2-1] 표본 수

학교별	빈도수(명)	비율(%)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150	49.6
조치원여자고등학교	92	30.5
세종고등학교	60	19.9

[표 2-2] 피 설문 조사자의 특성

	남자	여자	10대	20대
비율(인원)	47%(142명)	53%(160명)	50.4%(152명)	49.6%(150명)

2. 통일세대 의식 조사 결과

위와 같은 조사 설계 과정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상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상징인식과 실재로서의 통일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그 외에 통일세대들의 통일의식과 의지를 조사해 보고자 하였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 낸 바 결과에 대한 요약해 보고자 한다.

첫째, 상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인식 형성과정을 알아보려고 하는 조사에서 통일세대들은 주로 TV를 통한 방송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상징으로서의 통일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에서 상징으로서의 통일을 자주 언급하는 대상, 즉 상징으로서의 통일을 상호작용하는 대상으로는 TV속 정치인, 학자' 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세대별로 의미 있었던 인식의 차이는 10대는 20대 보다 상징으로서의 통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0대들이 통일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감을 다른 세대보다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과 통일관과 안보관, 대북관이 안보관을 중심으로 합치되어 있는 계층은 20대 남성으로 이는 군 복무의 영향이라 판단되며 통일에 대한 상징인식이 가장 부동적이면서도 편향될 수 있는 계층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상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가장 특기할만한 점은 통일세대 전 계층에 걸쳐 통일은 평화, 화해, 협조 등의 이미지로 상징화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면 긍정적으로 보이나 북한의 도발과 핵 개발 등 다수의 통일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인식에 반하는 사회적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시점에서 통일세대들의 이러한 상징인식은 부정당하고 내재화 되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설문 문항과 함께 제시하였다.

넷째, 실재로서의 통일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즉 내면화의 결과로는 통일이 '필요하다' 는 응답이 75.4%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을 근거로 긍정적인 내재화가 아직까지는 통일세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통일의 소요기간 등 기타 의견의 불일치와는 별개로 통일에 대한 필요라는 궁극적인 인식에서는 통일세대 내에서 인식의 합치 혹은 일종의 암묵적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통일세대들은 상징으로서의 통일을 TV와 인터넷, 그리고 정치인과 학자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고 있으나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현상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상징으로서든 실재로서든)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팽배하며 20대 남성들은 군 복무의 영향으로 편향된 통일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세대 전 계층에 걸쳐 통일에 대한 이미지는 현실, 즉 남북관계와 동북아정세 등 현실의 실재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은 이미지화, 액자화 된 피상적인 평화, 화해, 협력에 고정되어있다는 점이며 이 역시 절대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그 편익에 대한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의 끈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기술 하겠다.

1번 문항[표 3-1]은 상징으로서의 통일이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지, 사용된다면 어디에서 주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또한 확산되어 들어보았다면 어떤 매체를 통해 들었는지에 관한 질문이기에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을 위한 상징으로서의 통일의 확산 정도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전체 의견 중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TV, 인터넷 매체’ 39% (132명)였고 ‘중등교육기관 (중학교 및 고등학교)’ 26.6% (90명), ‘고등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 21.8% (74명)이 그 뒤를 이었다.

즉 통일 세대들은 TV를 통한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상징으로서의 통일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V나 방송매체는 개별적인 정보 수집의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통일 의식을 갖게 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보다 체계적인 상호작용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표 3-1] “통일” 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문항	전체	10대	20대	남성	여성
① 중등교육기관 (중학교 및 고등학교)	26.6(90)	37.3(68)	14.1(22)	12.1(18)	37.8(72)
② 고등교육기관 (대학 및 대학원)	21.8(74)	5.4(10)	41(64)	32.4(48)	13.6(26)
③ TV, 인터넷 매체	39(132)	44(80)	33.3(52)	41.9(62)	36.7(70)
④ 신문기사, 잡지	10(34)	9.8(18)	10.2(16)	9.4(14)	10.5(20)
⑤ 기타	2.6(8)	3.3(6)	1.4(2)	4.2(6)	1.2(2)

(%(명))⁹⁾

2번 문항[표 3-2]에서는 일상적 사회생활 속에서 주로 어떠한 역할 가진 행위자에게 상징으로서의 통일을 접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회조직 안에서 통일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지 알기 위해 조사했다.

1번 문항(표 3-1)의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보도 매체를 통해서 통일 관련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TV속 정치인, 학자’가 39.07%(11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생님, 교수님’이 30.46%(92명)로 그 뒤를 이었다.

통일세대들이 TV나 언론에 등장하는 정치인이나 학자를 통해 상징으로서의 통일을 접하고 그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식교육기관이나 가정이 아닌 2차적 사회화 과정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을 수도 있는, 자극적인 주제만을 다루기 쉬운 언론을 통한 정치인, 학자의 통일에

9) 본 장에서 제시 될 모든 표에 적용

대한 견해를 듣는 것으로 상징으로서의 통일의 대부분을 대체하는 것은 통일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상징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일세대들의 긍정적인 통일에 대한 상징인식이란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국가적 이익인 안보관의 확립과 사실에 근거한 대북관, 그리고 당위와 편의 양 측면에 대한 충분한 인식 위에 세워진 통일관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기성세대의 통일논의를 지속해서 접하고 그것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실재의 사회적 구성은 통일세대들이 편향된 통일관을 내재화하거나 통일논의에 대한 실망감과 회의감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크며 진부한 내용이라 치부하며 무관심으로 치부 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20대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선생님 교수님’의 선택 비율이 높은데, 이는 대학 과정에서 진입한 학생이 통일을 주제로 한 수업이나 강의를 접하기 더 쉽다는 것을 반증하며 20대의 통일 의식 형성의 일정부분을 대학교육이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검증되지 않은 언론을 통한 정치인, 학자들의 견해를 듣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3-2] 주변에서 “통일”이라는 단어 혹은 통일에 관한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항	전체	10대	20대	남성	여성
① 가족, 친척	7.28(22)	9.2(14)	5.3(8)	8.4(12)	6.25(10)
② 친구, 동료, 선후배	11.25(34)	1.3(2)	21.3(32)	9.8(14)	12.5(20)
③ 선생님, 교수님	30.46(92)	15.7(24)	45.3(68)	39.4(56)	22.5(36)
④ TV속 정치인, 학자	39.07(118)	60.5(92)	17.3(26)	33.8(48)	43.75(70)
⑤ 없다.	11.92(36)	13.1(20)	10.6(16)	8.4(12)	15(24)

3번 문항[표 3-3]에서는 통일 세대들이 자신들의 주변에서 통일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는 상징으로서의 통일이 사회작용을 거치고 내재화 될 때 ‘영향력있는 타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①번과 ④번 보기처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②번과 ③번 보기처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알아보았다.

‘바르고 꼭 필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에 대한 주제에 관심이 생긴다.’와 같은 긍정적 시각은 각각 22.5%(68명), 25.1%(76명)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고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긴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행동처럼 보인다.’와 같은 부정적 시각은 각각 5.9%(18명), 31.7%(96명)로 전체의 37.6%를

차지했다. 또한 ⑤번 보기 ‘큰 관심이 없다’ 14.5%(44명) 또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0대 설문 조사 결과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동처럼 보인다는 비중이 20대에 비해 높은데, 이는 10대들이 상징으로서의 통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10대들이 상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시켜주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표 3-3] 2번 문항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문항	전체	10대	20대	남성	여성
① 바르고 꼭 필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22.5(68)	6.5(10)	38.6(58)	22.5(32)	22.5(36)
②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긴다.	5.9(18)	6.5(10)	5.3(8)	4.2(6)	7.5(12)
③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행동처럼 보인다.	31.7(96)	55.2(84)	8(12)	45(64)	20(32)
④ 통일에 대한 주제에 관심이 생긴다.	25.1(76)	17.1(26)	33.3(50)	22.5(32)	27.5(44)
⑤ 큰 관심이 없다.	14.5(44)	14.4(22)	14.6(22)	5.6(8)	22.5(36)

4번 문항[표 3-4]에서는 응답자들의 통일 교육의 유무나 질적인 면을 판단하여 통일 의식 고취를 위한 실천 방안을 찾아보고 교육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질문이다. ①번이나 ②번 보기처럼 교육기관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는지 ③번 보기처럼 짧은 시간 안에 체험 및 견학을 통하여 교육을 받았는지 ④번 보기처럼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편향된 대적관과 안보관에 기반을 둔 통일 교육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보기를 나누었다.

전체 의견 중 다수를 차지 한 것은 ‘초·중·고등학교’ 45.%(168명)이었으며 다음으로 ‘고등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 24.4%(90명) 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통일의식 고취 및 통일 친화적 사회 구현에 있어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고등교육기관(대학 등)에서의 통일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표 3-4] 통일 교육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문항	전체	10대	20대	남성	여성
① 초·중·고등학교	45.6(168)	65.4(110)	29(58)	27.7(48)	62.5(120)
② 고등교육기관 (대학 및 대학원)	24.4(90)	14.2(24)	33(66)	29.5(52)	19.7(38)
③ 전문교육기관 ex) 통일 교육원	8.1(30)	7.2(12)	9(18)	5.6(10)	10.3(20)
④ 군	13.1(48)	2.4(4)	22(44)	23.6(42)	3.3(6)
⑤ 없다	8.8(32)	10.8(18)	7(14)	13.6(24)	4.2(8)

이 문항의 특이점으로는 ④번 선택지인 ‘군’ 항목이 전체 비율에서는 13.1%(48명)을 나타냈지만 20대 남성 조사에서는 36.2%(42명)로 여타 20대 여성 2.3%(2명), 10대(남녀 포함) 2.4%(4명) 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의무복무 기간 중 군대에서 받은 정신교육 등 대적관, 안보관 교육을 의미할 것이라 추정한다.

자료에서 보듯이 20대 남성들은 군에서의 대적관, 안보관 교육을 통일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인식을 군을 통해 습득하고 있는데 군 내부적으로는 대적관과 안보관이 확립되어야 하겠지만 군인이자 시민의 한 사람인 일반 장병들에게는 대적관과는 또 다른 통일관을 심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군 내부에서 객관적이며 검증된 통일 교육이 안보교육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4-1] ④번 선택지에서의 20대 남성 비율 비교

문항	전체	20대 남성	20대 여성	10대(남녀 포함)
④ 군	13.1(48)	36.2(42)	2.3(2)	2.4(4)

5번 문항[표 3-5]에서는 응답자가 사회적, 대중 여론에 의해 통일 인식이 바뀐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다. 특히 긍정적으로 통일 인식이 바뀐 사례를 통해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긍정적인 통일 의식 고취 방안을 탐구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통일 인식이 바뀐 사례 역시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①번 보기인 ‘통일의식이 바뀐 적이 없다’가 74.8%(22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②번 보기인 ‘통일의식이 바뀐 적이 있다’는 25.2%(76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10대와 20대를 구분해서 나누어 보자면 ②번 보기의 20대 비율은 24%(46명)로 10대 19.8%(30명)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개인에게 한 번 인식된 상징으로서의 통일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거치며 실재로서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개인에게 내재화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인에게 한 번 내재된 실재의 개념은 쉽게 변하지 않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사회적 환경과 대화, 교육 등을 통해 변화할 수 도 있다.¹⁰⁾

본 설문에서 20대들은 통일에 관한 인식이 바뀐 이유로는 대학의 폭넓은 교육, 심도 있는 수업 등을 통해 통일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바뀌었다고 답하였으며, 10대들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폭침 사건 등으로 인해 통일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하였다.

10) 앤서니 기든스, 『현대 사회학 6th Edition』, (을유문화사, 2011), p. 235

[표 3-5] 통일에 관한 인식이(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바뀌어 본적이 있습니까?

문항	전체	10대	20대	남성	여성
① 바뀐 적이 없다.	74.8(226)	80.2(122)	76(104)	84.5(120)	66.2(106)
② 바뀐 적이 있다.	25.2(76)	19.8(30)	24(46)	15.5(22)	33.8(54)

6번 문항[표 3-6]은 우리가 통일에 대해 얼마나 실현 가능하다고 인식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①, ②번 보기는 통일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⑤번 보기는 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체 의견 중 다수를 차지 한 것은 ‘10~20년’ 32.4%(98명)이었으며 그 뒤로는 ‘20~50년’ 28.4%(86명)로 통일의 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⑤번 보기와 같이 극단적인 비관론 또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처럼 현 통일 세대는 통일의 실현 가능성을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령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⑤번 보기를 선택한 20대(남녀 포함)가 8%(12명)인 반면 10대(남녀 포함)에서는 38.1%(58명)가 선택했을 정도로 10대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통일세대, 특히 10대들이 통일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상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상징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표 3-6]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이루어 질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문항	전체	10대	20대	남성	여성
① 1 ~ 5년	2.6(8)	2.6(4)	2.6(4)	4.2(6)	1.3(2)
② 5 ~ 10년	13.2(40)	15.7(24)	10.6(16)	11.2(24)	10(16)
③ 10 ~ 20년	32.4(98)	18.4(28)	46.6(70)	35.2(50)	30(48)
④ 20 ~ 50년	28.4(86)	25(38)	32(48)	25.3(36)	31.2(50)
⑤ 이루어지지 않는다.	23.2(70)	38.1(58)	8(12)	18.3(26)	27.5(44)

7번 문항[표 3-7]은 “통일”이라는 상징에 대한 피상적이고도 직관적인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①번 보기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상징 하고, ②번 보기는 연평도 포격 도발 이미지를 사용하여 북한의 도발 상황 및 안보적 위기의식을 시각화한 것이다. ③번 보기에서는 한반도의 긴장감을 판문점의 모습으로 시각화하였고 ④번 보기는 남과 북이 철책을 허물며 평화를 이루고 화합하는 모습을 시각화했다. 끝으로 ⑤번 보기를 통해 남과 북이 힘을 모아 협조, 평화라는 의미를 시각화하였다.

[표 3-7] “통일”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그려본다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문항	전체	10대	20대	남성	여성
	4.6(14)	1.3(2)	8(12)	4.2(6)	5(8)
	17.2(52)	26.3(40)	8(12)	19.7(28)	15(24)
	15.2(46)	21(32)	9.3(14)	14(20)	16.3(26)
	27.8(84)	23.6(36)	32(48)	28.1(40)	27.5(44)
	35(106)	27.6(42)	42.7(64)	33.8(48)	36.2(58)

전체 의견 중 다수를 차지 한 것은 ‘협조를 나타내는 ⑤번 그림’ 35%(106명)이었으며 그 뒤로 ‘화해를 나타내는 ④번 그림’ 27.8%(84명)으로 상징으로서의 통일은 평화, 화해, 협조 등의 이미지로 상징화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통일세대들의 이러한 인식은 부정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도발과 핵 개발 등 다수의 통일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인식에 반하는 사회적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통일세대들의 이러한 상징인식은 부정당하고 내재화 되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다.

이는 과거 2000년대 초반 햇볕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약 10년의 대북포용 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교류·협력의 표면적 모습이 가시화되고 부각되었던 시기에 유년기를 보낸 현재의 통일세대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내재화 한 인식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러한 인식은 통일을 이상화, 관념화 시켜 현실과는 괴리된 통일관과 대북관을 형성하게 되며 무조건적인 교류, 협력이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밝혀진 이 시점에서라도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을 주장하게 하거나, 통일을 현실의 영역에서 풀어나가길 거부하는 행태나 내재화된 실재가 극단적으로 부정당함으로서 겪는 무력감과 피로감이 통일에 대한 피로감, 무기력감, 무관심으로 발전 될 수 도 있다.

사실 이러한 상징인식이 통일, 즉 통일관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일관과 대북관을 정확히 구별해서 교육받지 않은, 아니 통일과 북한에 대한 교육 자체를 받지 못하고 심도 깊은 고민이 부재되어 있는 통일세대들에게 이러한 상징인식은 부정적이며 북한의 이중적 성격과 통일관과 대북관의 이원화된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인식의 모순에서 나오는 통일에 대한 회의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8번 문항[표 2-11]은 북한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동일 민족 또는 상호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할 대상인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통일이라는 상징이 아닌 북한이라는 실재에 대해 통일세대들이 인식하는 상징성과 사회적 실재의 실체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이다.

전체 의견 중 다수를 차지 한 것은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라는 응답이 41.7%(126명)이었으며 그 뒤로 ‘상호 협력해야 할 대상’ 31.7%(96명)으로 북한을 안보위협으로 보는 비율이 통일의 대상으로, 그리고 상호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비율과 비슷하였다.

이는 통일세대 사이에도 대북관의 분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7번 문항에서 답변한 통일에 대한 상징인식과 비교해서 본 질문에서는 북한을 안보위협적 존재라고 답변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상징인식에 대한 모순이 드러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표 3-8] 현재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항	전체	10대	20대	남성	여성
① 통일의 대상	16.5(50)	3.9(6)	29.3(44)	14(20)	18.7(30)
② 상호 협력해야 할 대상	31.7(96)	42.1(64)	21.3(32)	38(54)	26.3(42)
③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	41.7(126)	39.4(60)	44(66)	38(54)	45(72)
④ 우리나라와는 별 상관없는 대상	5.9(18)	7.8(12)	4(6)	8.5(12)	3.7(6)
⑤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	4.2(12)	6.5(10)	1.4(2)	1.5(2)	6.3(10)

이 문항의 특이점으로 20대 남성이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65%(44명)로 20대 여성 31.42%, 10대(남녀 포함) 39.4%(60명)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기록 했다.

이는 [표 2-6] ‘통일교육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복수선택 가능)’의 ④번 보기가 20대 남성 비율이 높다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20대 남성의 경우 통일관이나 대북관 형성에 있어 편향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표 3-8-1] 20대 남성의 통일인식

4번 문항	전체	20대 남성
④ 군	13.1(48)	36.2(42)

8번 문항	전체	20대 남성
③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	41.7(126)	53.65(44)

9번 문항[표 3-9]은 답변에 따라 통일이 필요한 이유, 불필요한 이유로 나누어지는데 근본적으로 통일에 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서 통일세대들의 통일의식과 통일의 당위성과 방향성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드러나는 질문이다.

조사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5.4%(228명)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통일의 소요기간 등 기타 의견의 불일치와는 별개로 통일에 대한 필요라는 긍정적인 인식에서는 통일세대 내에서 인식의 합치 혹은 일종의 암묵적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체	10대	20대	남성	여성
① 필요하다.	75.4(228)	67.1(102)	84(126)	81.6(116)	70(112)
② 불필요하다.	24.6(74)	32.9(50)	16(24)	18.4(26)	30(48)

10번 문항[표 3-10]은 통일이 과연 필요하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필요 한지 구체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문항이다. ①번 보기는 통일의 민족적 이유를 강조하고 있고 ②번 보기 통일 후 생길 수 있는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강조하고 있고 ③번 보기는 인구와 국토면적의 증가에 따른 통일 이후의 국력강화, ④번 보기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일의 평화적 측면에서 각각 바라보고 있다.

통일에 긍정적인 통일 세대들은 통일의 당위성으로 ‘민족성’을 꼽은 비율이 전체의 31.5%를 차지하며 가장 큰 이유로 드러났다. 이는 통일 세대들이 민족 화합과 발전이라는 통일의 민족성에 의한 당위성을 중요시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10] 통일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체	10대	20대	남성	여성
① 남북한 원래 한민족 한 국가였기 때문에	31.5(72)	17.6(18)	42.8(54)	34.4(40)	28.5(32)
② 통일 후 발생 할 인구증가, 국토 확장 및 경제적 이익 때문에	28(64)	31.3(32)	25.3(32)	29.3(34)	26.8(30)
③ 안보위협요인인 제거되기 때문에	20.1(46)	35.2(36)	8(10)	24.1(28)	16(18)
④ 인도주의적 문제(북한인권, 식량 부족 및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 포로 등)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16.6(38)	15.9(16)	17.4(22)	10.4(12)	23.2(26)
⑤ 기타 이유	3.8(8)	.	6.5(8)	1.8(2)	5.5(6)

11번 문항[3-11]에서는 통일이 불필요하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불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문항이다. ①번 보기는 통일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②번 보기는 통일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리고 ③번 보기는 이질적인 체제와 환경적 가치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끝으로 ④번 보기에는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의 불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 중 통일을 반대하는 통일세대들은 사회적 혼란(32.4%)과 환경적 가치관(27%)을 이유로 통일에 크게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세대들이 통일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교육을 중점으로 한 긍정적 상징과 실제로 인식의 변화를 꾀하여야 한다.

[표 3-11] 통일이 불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체	10대	20대	남성	여성
① 통일 후 남한, 북한의 통합에 따른 치안과 같은 사회적 혼란 때문에	32.4(24)	40(20)	16.6(4)	30.7(8)	33.4(16)
② 통일 후 생길 수 있는 통일세 신설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21.7(16)	28(14)	8.4(2)	20.7(8)	16.6(8)
③ 통일 후 체제적인 갈등과 환경적 가치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27(20)	24(12)	37.3(8)	15.4(4)	33.4(16)
④ 북한을 아예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8.1(6)	.	25(6)	23.2(6)	.
⑤ 기타 이유	10.8(8)	8(4)	16.7(4)	.	16.6(8)

위에 제시된 상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상징화와 실재로서의 통일에 대한 내면화의 방법은 첫째, TV나 방송매체는 개별적인 정보 수집의 역할에 그치기 때문

에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통일 의식을 갖게 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보다 체계적인 상호작용 환경조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둘째, 통일세대들이 TV나 언론에 등장하는 정치인이나 학자를 통해 상징으로서의 통일을 접하는 것은 자극적인 주제만을 다루기 쉬운 언론의 특성과 이념적이든 학술적 신념이든 편향된 견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큰 정치인, 학자의 특성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며 20대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학 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이 통일세대들에게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통일에 대한 상징인식과 실재 구성의 여건을 보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제 4장에서는 건전한 통일에 대한 상징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조성 차원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대학에서의 북한학을 교양과목으로 가르치는 것과 대통령 직속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강화에 대해 제안 할 것이다.

IV. 상징화를 통한 통일 친화적 사회 구현 방안

앞서 서술하였듯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상징의 정의와 실재의 사회적 구성은 정태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再)정의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세대들이 가지는 통일에 대한 상징인식은 한 번 정립되었다 하더라도 환경과 동기가 존재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이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면 변화할 수 있을뿐더러 그 환경과 동기가 긍정적인 방향이라면 개인과 사회집단의 통일에 대한 상징인식은 물론 실재로서의 통일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통일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피상적이고 막연한 통일관, 안보관과 대북관이 섞여 있는 불안정한 통일관과 TV와 인터넷, 언론을 타고 전해진 정치인과 학자들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듣고 상호작용 아닌 상호작용을 통해 상징을 규정하고 실재를 정의하는 현 실태를 비판해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즉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상징화를 통한 ‘통일 친화적 사회’의 구성 방안에 대해 두 가지 방안을 제언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그 형태가 다양할 것이나¹¹⁾, 개인의 한 번 형성된 사회적 실재와 상징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적인 필요조건은 전체의 변형과정을 위한 합법적 기구의 이용가능성이다. 합법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새로운 현실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충당되고 유지되는 단계들, 그리고 모든 다른 현실들의 폐기나 거부도 포함된다.¹²⁾ 따라서 사회의 공식적인 기구를 통한 긍정적 상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학에서의 통일교육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할 강화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1. 통일교육 측면 : 북한학의 대학교양화

통일교육은 우리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강조되었다.

반공, 승공, 북진통일의식의 전파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던 통일교육은 교육과정의 발전에 따라 남북한 체제의 비교와 교류협력, 민족공동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남북 관계 악화에 따라서 이러한 통일교육은 위축되기도 하였으며 확고한 안보관을 설립해 주는 것이 1차적 통일교육으로써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즉 통일교육이 확고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체 정치체제 권위당국자들의 이념 및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리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¹³⁾

11) 거시적, 정책적 측면 뿐 만이 아니라 일부사회계층의 운동, 캠페인 등 미시적, 문화적 방안을 뜻함. 의미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실제 효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12) Peter L. Berger ; J. Luckman, 『지식형성의 사회학(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기린원, 1989), p. 255

13) 변중현, 「20대 통일의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연구원 제 21권 1호』, (통일정책연구, 2012), pp. 173-174.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이자 통일을 위한 협력과 인도적 지원 상대인 두 얼굴의 북한을 정확히 인식하는 가운데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당위성, 필요성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한 내재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실현시켜줄 여러 방안 중 초·중·고등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은 가장 공식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하지만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은 학계에서도 많이 논의되어 공통된 ‘통일’ 교과를 설치하는 방법 등 여러 효율적 방법이 제시 되었는데 바. 또한 통일의 다양한 성격과 다면적인 북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내재화 할 수 있는 생애주기적 인지발달 단계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 교육과정까지의 단계라고 보기보다는 대학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대학 통일교육을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 통일교육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 통일교육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통일 교육은 학교 통일 교육과 사회 통일 교육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¹⁵⁾ 학교 통일 교육은 통일미래 세대를 키워나가는 목적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사회 통일 교육은 현재의 통일 문제나 여론을 수렴 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통일 교육을 위해서 통일 교육 지침을 내리고 도서관 강연을 통해 통일 기반을 조성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통일 교육을 나누는데 있어 대학교 통일 교육은 이 둘 사이의 애매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학교 통일 교육처럼 이론과 과정에 얽매인 1차원적인 수업을 진행하기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고 사회통일교육기관 처럼 정책을 내세우거나 근본적인 통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과목을 가르치긴 보다는 통일관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북한학을 전국의 대학에서 필수교양 혹은 공통교양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현재까지 북한학과 통일정책학 등의 과목은 보편적이라기보다 정치외교학 및 교육학 전공생들 위주의 소수 학생들만이 관심을 갖고 수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학에 대한 전국 대학의 교양과목 설치는 이러한 특정 전공생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벗어나 국가적 대사에 대한 국민 교양의 차원에서 모든 대학생이 접할 수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 내 북한이나 통일 주제 관련 교양과목이 신설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들어볼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고 대학생들이 북한, 통일 관련 강의를 듣고 통일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큰 긍정적 의미를 주고 후대 통일 세대를 이끌 대학생들에게 큰 시너지 효과를 준다는 결과 또한 나타났다.¹⁶⁾ 이러한 긍정적 영향을 바

14) 변중헌, 「청소년의 통일의식과 학교 통일교육의 진화」, 『윤리교육연구 29권』 (한국윤리교육학회, 2013), p. 3

15) 같은 책, p. 158

16) 성장환·김영하, 「교대생들의 통일비용에 관한 의식조사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 10집 제1호 (2002); 차승주,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원 연구용역보고서, 2010); 부산대학교 학생 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용하·김태완의 조사연구에서도 대학 통일교육이 학생들의 통일의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탕으로 북한학이 통일교육적 차원에서 대학 교양과목으로 검토되어지고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전국 70여개 대학에 설립된 75개 북한, 통일문제 관련 연구소들의 협의회인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가 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각 대학 내에서도 공론화 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대학에서 통일교육 차원의 북한학을 교양과목으로 가르치게 된다면 비단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내재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과제나 기타 흥미에 의한 대외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국민 통일인식의 개선까지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의식에 대한 공모전이나 대학생 참여 세미나, 현장 탐방과 같은 실습 프로그램 등 학점이나 성적이라는 강제적 이유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통일 교육은 대학생들에게 더욱더 큰 통일 의식의 효과를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에서의 북한학이나 통일의식 교육에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학교나 교수에 의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된 관점을 강요하고 정권에 따라 통일교육의 기조와 방향이 흔들린다면 학생들에게 통일 교육에 대한 열의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¹⁷⁾ 대학은 자유로운 진리 탐구 가치의 산실인 대학 안에서 장차 통일을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이 통일정책과 북한학 등 교양과목을 통해 바른 통일관을 형성하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학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 강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 구조 안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통제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헌법에서 대통령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의해 설립된 헌법기관이며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자문을 둘 수 있는 기구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규정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남 북 간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 및 자문을 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문 기구이다. 기능으로써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범국민통일운동체로서 통일의지와 역량의 결집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역회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운영 하고 있으며 자문위원들은 시도의회의원이나 국내 외 각 지역에서 통일을 대변 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72

친 것으로 나타나 있다.

17) 조정아(통일연구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방안』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문, 2013), pp. 295-296.

곳의 지역 협의회에 나누어져 약 20,000여 명이 활동 하고 있다.¹⁸⁾

하지만 이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가와 국민의 의사를 중개, 정책 및 자문을 건의하고 통일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자문기관이라는 이름에 무색할 만큼 두드러진 행동 즉 전문성이 보이지 않고, 정부 부처와의 기능 중복, 그리고 현 정부 통일정책의 입맛에 맞추어 홍보와 교육 활동을 주관 하는 등 헌법 조직이라기 보단 현 정부를 대변하는 ‘관변단체’라는 이미지가 제기 되고 있다.¹⁹⁾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통일 세대의 인식 고취, 통일 친화적 사회 구성의 해결 방안으로 국내·외로 뻗어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 기구와 자문 위원들을 이용하여 자문기구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고 범국민적 통일 여론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제언 하고자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청소년 대상 특화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의지 제고를 목적으로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 골든벨, 교육 동영상 제작, 통일 퀴즈, 통일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통합적 교육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써 분과위원회중 통일 교육 분과를 통해 통일 세대들에게 효과적이고 통합적 교육을 위한 통일 교과서를 제작 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분과위원회중 통일교육위원회의 기능은 통일 교육 활성화 및 통일 의식 제고 이다. 통일 교육 분야의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을 하고 있는 이곳을 적극 이용 하여 현 시대에 발맞춘 통일 교육을 내세우고 동 분과위원회중 청년위원회와의 연합적 교류를 통해 통일 세대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구체적이고 확실한 통일 교육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내외적 활동 능력에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외의 계층, 직능, 연령, 지역, 정치이념을 대표할 수 있는 약 20,000여명의 자문 위원들과 272곳의 지역 협의회를 두고 있다. 이들을 적극 이용하여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아카데미 활동과 세미나 활동, 시민참여 문화행사 등을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이 안에서도 통일후계세대인 10대, 20대 즉 통일세대를 위한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나 워크숍,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 친화적 교육 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들이 지역협의회 안에서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통일 전망대나 판문점 등과 같이 북한과 관련된 관광 견학지에서도 통일 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파견 교육 지원을 통해서 통일 교육의 방안을 확대 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전 세계 43곳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다. 해외 지역에서도 한국의 통일 문제나 북한에 관해 지식이 부족한 교포 2세들에게 단기간의 짧은 초청 행사나 명사 강연 통일 교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통일의 인식을 깨닫게 하거나 바꿀 수 있는 체계적 통일 교육 정책 마련 또한 본 연구의 취지에

18) http://www.nuac.go.kr/html/int_com_org.jsp?menuid=G010102 (검색일: 2013.12. 11).

19) 김종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전 방향 연구』 (동국대학교 북한학 연구소, 2011), p. 13.

맞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국내외로 뻗어있는 지식적 기반을 갖춘 200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을 바탕으로 통합적 통일 교육을 이끌어 내어 자문기구의 확실한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고 본 연구 목적인 통일 세대의 통일 의식 고취와 통일 친화적 사회 구성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V. 결 론

통일의 미래는 누군가 거저 주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통일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에 대한민국 내부의, 즉 우리사회 안에서의 올바른 통일 담론의 형성과 방향성에 대한 합의, 당위성에 대한 내면화는 우리사회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통일의지를 확산시키는 기본 조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바른 통일담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개인의 의식이 매우 중요한데 개인은 ‘통일’이라는 단어, 즉 상징으로서의 통일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 실재로서의 통일을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통일이라는 상징과 실재를 내면화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통일담론과 국민의 통일의식, 통일의지를 바라보고 있자면 바람직한 방향, 긍정적인 통일의식들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통일에 대한 회의감과 무관심이 팽배함을 느꼈다. 통일을 도구 삼아 이념적 분쟁을 벌이는 세력은 넘쳐나고 이와 같은 갈등으로 인해 국론은 분열되며 북한의 정세는 더더욱 혼란스럽게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복합적인 작용은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더욱 불 지피는 것이 아니라 통일 논의에 대한 피로감마저 들게 만든다. 특히 통일세대라고 불리는 10대, 20대들은 상징으로서의 통일과 접할 기회조차 많지 않고 실재로서의 통일을 마주하기에는 편향된 사고로 물들었다. 이는 통일세대의 잘못이기 보다는 통일을 이념의 방패로 삼고 안보를 전쟁의 인질로 잡고 북한의 실체를 의도적으로 가린 기성세대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이론과 실재의 사회적 구성이론에 따르자면 주관적인 실재는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으며 사회 속에 존재하는 것은 이미 주관적 실재의 진행적인 수행과정을 동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변형은 여러 다른 정도의 수정을 요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현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상징인식과 편향되고 편협한 통일관은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사회가 할 일은 그러한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발하고 확산시킬 제도와 환경의 확충이다.

상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상징화 및 실재로서의 통일에 대한 사회적 구성을 통해 바른 통일담론이 국민들에게 내재화된다면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고 통일의식 역시 제고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한 번 시작이 된다면 [안보의 정치화 > 통일의 (전쟁)도구화 > 국민 피로감 상승 > 통일의지 약화]라는 지금까지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통일에 대한 관심 상승 > 긍정적 상징화 > 통일의 내재화 > 통일의지 강화]라는 선순환이 이루어져 사회 곳곳에서 통일에 대한 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될 것이며 통일에 대한 열망이 분출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가 바로 ‘통일친화적 사회’이며 이러한 사회만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통일로 가는 여정의 출발점일 것이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양으로서의 북한학은 이제 막 고등교육의 문턱에 들어서 제 2

차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될 새내기 대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바른 인식을 형성하게 돕는 자양분의 역할을 할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강화와 그 기능의 발휘는 지역사회에, 즉 우리사회 곳곳에 통일담론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 실정과 특색에 맞는 통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해 주어 통일 친화적 사회 구현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론을 분석의 틀로 설정하고 상징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론과 실재의 사회적 구성이론을 ‘통일’에 적용시켜 분석하며 통일세대의 입장에서 현재 통일세대 안에 만연한 통일 피로 및 무관심 등 부정적 인식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하는 시도를 했으며 기성세대에게 통일 친화적 사회 구현 방안을 제언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하는 동안 인터넷과 방송 등으로 편향된 통일관, 대북관, 안보관이 형성되고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실태를 목도함과 동시에 아직까지 꺼지지 않은 통일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바른 통일관, 안보관을 엿볼 수 있어 한편으로 뿌듯함을 느꼈다.

상징으로서의 통일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그 인식들이 실재로서의 통일의 내면화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한 통일의식과 통일의지가 성장하고 발현 될 때 우리사회는 단결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통일 친화적 사회의 구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세대는 그 중심에 서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통일의 실재화가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앤서니 기든스, 『현대 사회학 6th Edition』 (을유문화사, 2011)
- 피터 L. 버거,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nchor Books, 1967)
- 비판사회학회(정태석 외 18명 공저), 『사회학 : 비판적 사회읽기』 (한울, 2012)
- Peter L. Berger ; J. Luckman, 『지식형성의 사회학(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기린원, 1989)

2. 논문 및 기타자료

- 홍성의 「탈냉전시기 한국의 통일정책과 북핵문제」, 『월간 북한 통권430호』 (북한연구소, 2007)
- 변종현 「청소년의 통일의식과 학교 통일교육의 진화」, 『윤리교육연구 29권』 (한국윤리교육학회, 2013)
- 「20대 통일의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연구원 제 21권 1호』, (통일정책연구, 2012)
- 김종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전 방향 연구』 (동국대학교 북한학 연구소, 2011)
- 성장환·김영하 「교대생들의 통일비용에 관한 의식조사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0집 제1호, 2002)
- 차승주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서의 통일교육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원 연구용역보고서, 2010)
- 조정아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방안』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 회의 발표문, 2013)
- 이경희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대한교육 방향』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11)
- 박채용 『한국 역대정권의 통일 교육 분석과 대학생들의 통일의식강화를 위한 설문 조사와 그 실천적 대안』 (한국 동북아 논총 15집, 2000)
- 이경태 『바람직한 대학 통일 교육 방향』 (대한정치학회, 2004)
- http://www.nuac.go.kr/html/int_com_org.jsp?menuid=G010102 (검색일 : 2013. 12. 11)

<통일논문 부문 우수상>

남북 협상기법 연구

-경제교류협력 분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손지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고병선

1장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 제2절 선행연구검토
-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2장 개별 국가 간 경제교류협상 분석

- 제1절 동서독 경제교류협상
- 제2절 양안 경제교류협상
- 제3절 분단국 협상의 함의

3장 남북한 경제교류 협상 현황

- 제1절 남북한 경제교류 협상의 역사
- 제2절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분야별 분석
- 제3절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특징

4장 북한의 협상기법 분석 및 평가

- 제1절 북한의 대남 협상기법 특징
- 제2절 경제 분야 협상 접근 방법
- 제3절 북한 경제 분야 협상 측면에서의 태도

5장 결론: 정책제언

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북한의 김정은 시대가 개방됐다. 김정은은 1983년 1월 8일생으로 추정되며 스위스 베른 대학에서 학업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서구의 생활과 학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기대되며 과거의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김정일 보다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이러한 기대에 부흥하듯이 김정은 제1비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미키마우스가 나오는 공연을 보고 평양에 거대한 규모의 놀이공원 건설 통해 북한 사회가 결코 폐쇄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앞두고 평양에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였고,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들이 곳곳에 세워졌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만 국한된 개발일 뿐 지방도시는 평양과는 대조적으로 아직도 식량난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지도층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평양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지방 도시들은 더욱 양극화에 빠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이상은 4월 15일 인민군 열병식에서 20분간 연설에서 김정은 제1비서가 한 말이다. 이후 김정은 총비서는 공식석상에서 계속해서 현대화와 세계화를 강조했다.

이렇게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김정은 체제는 이전 김정일 체제와는 다르게 남한과의 대화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유언으로 몇 가지를 당부했는데 그 중에는 중국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강제해 온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중국에 이용당하는 것을 피하라고 하였다고 탈북자는 증언했다.¹⁾

5.24조치 이후 북한은 남한과의 교역 중단으로 다른 생존 방법을 찾았고 그것은 혈맹 국가라고 부르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이 증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 북·중 교역은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이 김정일의 유언을 가슴 속에 각인 시키고 있다면 분명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도 다각적으로 모색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북한 경제 잠식화에 대해 걱정하는 북한의 상황을 이용하여 우리는 향후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따라

1) 뉴센 기사, 2012년 4월 13일자,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4131645391001

서 남북 관계에서 특히 협상이 주요 중심주제가 될 것은 자명할 것이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기 위해서는 협상 시 우리 측의 협상 방법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남북 협상은 다른 협상과는 다르게 판세를 쉽게 예측 할 수 없다. 최고지도자의 지시를 받고 온 북한 협상 팀은 협상 테이블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회담장을 나가는 돌발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북한의 의중에 대해 혼돈하여 협상장에서 유리한 판세를 이끌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 간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돌발 행동을 막고 우리가 대응해야 할 협상 방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협상전문가의 필요성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할 것인데, 이는 향후 남북 협상에서 남한의 입장에서는 실익을 얻으면서 북한을 합리적인 협상 파트너로 자리매김 시킬 수 있는 정책입안자 및 협상가들에게는 ‘교훈’ (lesson learned)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선행연구검토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을 하는가”는 북한의 협상 태도에 대해 유엔군 수석 대표였던 조이 제독이 자신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이 책은 휴전 이후 만들어진 책으로 북한의 협상 방법에 대해 가장 고전적인 저서로 손꼽힌다. 조이 제독의 저서 이후 1960년대 말까지 남북의 대화가 진행된 적도 없었고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인식 또한 대화의 상대방보다는 적의 개념에 가까웠기 때문에 협상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1970년대 초에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면서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김태서는 1976년도에 “협상이론으로 본 북한의 대남 전략 분석: 협상유형과 전술전개 과정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이 시기 연구는 북한의 협상 태도를 양보와 타협이 수용되지 않고 ‘남조선 혁명’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인식하여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협상 전술과 북한 협상의 특징을 논하였다. 그 이후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통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가는 가운데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북한 협상 행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대표적인 저술로 김용호의 “탈냉전시대 북한의 협상스타일과 행태분석: 남북기본합의서와 핵관련 협상을 중심으로”가 있다.

또한 기존의 대화들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화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임동원 “남북고위급회담의 전개과정”, 김도태 “탈냉전기 북한의 대남 협상 행태: 지속성과 변화” 등이 대표적이다.

1993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협상 태도 및 미국과 남한과의 협상 태도의 다른 점을 주제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정옥임의 “북핵 588일! 클린턴 행정부의 대응과 전략”, 전인영의 “북한의 대미 협상의 특징”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협상 행태를 게임이론으로 보는 연구도 있는데 김재한의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갈등과 협상 및 예측”이 대표적인 저서이다.

기존의 저서들은 북한 협상 태도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식해 냉전 종식 후, 북한의 협상 태도가 유연하게 변한 점을 설명 못하고 있으며, 협상 과정만 설명하여 이후 협상에서 발전 방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의 남북관계는 기존의 정치·군사협상 이외에 경제협상이 수차례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경제협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와 문제점을 개선하여 북한 협상행태를 이해하고 특성을 분석해 협상단이 실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할 것이다.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 중국과 대만, 그리고 통일 전의 독일이다. 시간적 인 범위로는 남북한의 경우 1971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현재까지이며, 사례로 들고 있는 동서독은 1945년 분단에서부터 통일에 이르는 시점까지, 양안은 1979년부터 현재까지이다.

국제협상을 진행하면서 외교 담당자들은 상대국가와 협상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내부협상을 병행해야한다. 이러한 국제협상의 특성을 게임이론의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퍼트남(Robert Putnam)의 양면게임(Two-Level Game)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협상을 “협상과정”과 “비준”이라는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즉, 국제수준의 협상과정을 “1단계 게임”으로 그리고 국내수준의 비준과정을 “2단계게임”이라고 한다. 이 각 단계는 선후관계가 반드시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협상’과 ‘비준’을 나누는 것은 논의 전개를 위한 구분일 뿐이다. 퍼트남은 윈셋(win-set)을 중요시했다.

퍼트남이 제시한 양면게임의 논리에 따르면 윈셋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①국내 여러 집단의 이해 및 제후관계, ②국내제도, ③국제교섭에 임하는 협상대표의 전략 등 세 가지이다.²⁾ 이외에도 국제적 제약변수,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윈셋의 크기를 결정한다.

퍼트남의 이론에 따르면 ‘찬성-반대라는 측면에서 2단계 비준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종류의 1단계 합의의 집합’이 윈셋이다. 윈셋은 국내외적인 것과 대외적인 측면에서 모두가 합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범위이다.

본 논문에서는 퍼트남의 양면게임 논리를 바탕으로 남북 협상을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북한과의 경제교류 협상에서 윈셋을 조정하기 위해 우리 측의 협상단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에서 윈셋을 사용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남북관계는 양자가 동등하지 않다. 남북한은 정치체제도 상이하고 경제력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남한은 협상 담당자 뒤에 정당 및 사회단체들이 있지만 북한은 독재체제로 수령³⁾의

2) Robert D.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2, no.3(1993), p.442.

지시에 따라 모두가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협상은 남북한의 당사자뿐만 아니고 주변국들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것은 협상을 단순한 게임이 아닌 다자간의 복잡한 게임으로 만들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언제나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로 압박한다면 남한 또한 경제제재에 동참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남북 협상에 영향을 끼치는 또 하나의 변수이다. 따라서 이러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면서 남북협상 구조가 가지는 시사점(implication)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3) 북한에서의 수령은 김일성이지만, 김정일 역시 수령이라는 호칭만 쓰지 않았을 뿐 그에 상응하는 권력과 체제를 구축하여 북한을 지배하였고, 현재의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역시 수령의 권력을 이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장 개별 국가 간 경제교류협상 분석

제1절 동서독 경제교류 협상

서독 정부는 동서독의 경제교류가 서베를린의 고립을 막고 동독 공산당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서독정부는 서방지원을 통해 서독이 잘살게 되면 경제난에 허덕이는 동독주민들은 자연적으로 소련체제에 대항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소련군들은 어쩔 수 없이 점령지역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⁴⁾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연합국 대표들은 동서독간 경제교류를 ‘내독무역(Innerdeutscher Handel)’이라 하며 독일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취급하여 동서독은 하나의 경제관계를 구축했다. 서독은 1949년 10월에 프랑크푸르트협약을 체결하였다. 동서독 간에 처음 체결된 협약에서 동서독기업이 다음 해에 거래할 수 있는 물품의 목록을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였다.⁵⁾ 서독은 이 협정이 동독과의 거래에서 조정이나 통제가 가능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차단하며 서독으로 흡수 될 수 있는 동독의 공산주의에 대한 방패막이로 인식했다. 이후 1951년 9월에는 동서독 간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베를린 협정⁶⁾(‘독일마르크(서독) 유통지역과 독일마르크(동독) 유통지역 간의 교역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독일 통일이 진행되면서 수차례 계정을 거쳤다.

‘베를린 협정’을 맺음으로써 체결 업무를 서독 측에서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가 설립한 “내독거리신탁관리처”가 담당했는데, 이 신탁관리처의 책임자가 연방정부와 서베를린시의 위임을 받아 동독 대외무역부의 대표와 협상을 펼쳤다.⁷⁾ 서독은 동독을 특수한 관계로 인식하고 다른 외국과의 교류와는 다른 방식을 보였다. 반면 동독은 지속해서 대외무역성에서 교역을 지속해 국가 대 국가의 모습으로 협상에 임했다.

한편, 미국은 동서독 간의 교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미국의 동유럽 정책은 ‘서방경제력의 강화 -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경제력 약화’ 이것이야말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국제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이라는 발상에

4) 정진상, ‘통일전 동·서독간 경제교류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Vol.16 No.1 [2006], p.4.

5) 최성근, “‘민족내부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에 관한 연구 : 동·서독간 ‘내독거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동서독간 ‘내독거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p.41.

6) 베를린 협정이 지닌 특징은 첫째, 동서독간 교역은 원칙상 서독과 동독 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교환 가능하고 외국산 제품의 교역은 동서독의 합의를 거쳐 진행한다. 둘째, 물품대금 지급은 교역 당사자 간에 직접 청산하지 않았고 서독 연방은행과 동독 국가은행을 통해 상호 청산방법에 의해 행한다. 셋째 재화의 교역은 쌍무직(bilateral)으로 이루어져 재화의 반입과 수출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도록 한다.

7) 최성근, “‘민족내부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에 관한 연구 : 동·서독간 ‘내독거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동서독간 ‘내독거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p.41.

서 출발했다.⁸⁾ 미국이 1949년 2월 “수출통제법”을 제정하고 1949년 12월 15일 “미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독은 협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독은 경제적 우위에 입각하여 인도 교류 및 인적 교류에 대해서는 창구를 열어놨었다. 서독의 정치가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인적교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여겨 통일에 기여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독의 수상인 아데나워는 “공산국가의 전쟁준비에 이바지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⁹⁾라고 하며 미국을 안심시켰다.

동독은 2차 대전 이후 보상금 문제로 많은 재정을 소요하여 국가 산업기반에 투자할 돈이 부족했다. 생존을 위해서 서독과의 교역은 필수였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동독은 서독과의 교역을 통해 보충하려 했다. 동독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서독과의 교류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하지만 서독 정부는 동독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자립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소련과의 경제적 밀착을 이완 시키고 인적교류를 통해 서독의 우위성을 강조했다.

1961년에 동독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동독 정부가 베를린 장벽을 만들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그전보다는 낮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동독 정부는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경제협력에 관심을 가졌다. 1963년 12월에는 베를린시정부 지정 협상대표와 동독 정부 전권 위임자간에 최초의 통과사증협정을 체결하였고, 1964년 9월에는 차관협상과 제2차 통과사증 협정 체결에 따라 10월초 동독은 1만여 명의 죄수들에게 사면조치를 취했으며, 11월초부터는 11월말부터 연금수혜자들에 한해 서독으로의 여행을 허가하였다.¹⁰⁾

이후에는 동독 회사들에게 장기 용자를 제공하며 동독과의 협력을 추구했다. 1969년 빌리브란트는 신동방정책으로 동독과의 교류를 더욱 증가시켰다. 동독은 서독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교류의 증가가 서독의 관계정상화 노력임을 알아내고 자신들에게 더욱 좋은 조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독립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교류를 끊을 수 없는 이유로는 경제교류로 동독 주민들의 불만을 잠시나마 해소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교류를 중단할 시 동독주민들의 불만을 견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서독과의 교류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후 동서독은 동서독 기본조약 추가의정서 제7조를 통해 내독 경제교역은 ‘중전협정에 근거’하여 진행했다. 이를 통해 통일 이전까지 내독교역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이뤄졌다.

8) 정진상, ‘통일전 동·서독간 경제교류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Vol.16 No.1 [2006], p.3.

9) 최성근, ‘민족내부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에 관한 연구 : 동·서독간 ‘내독거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동서독간 ‘내독거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p.27.

10) 정진상, ‘통일전 동·서독간 경제교류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Vol.16 No.1 [2006], p.7.

제2절 양안 경제교류 협상

양안은 중화민국정부가 1942년 12월에 대만으로 떠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부터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 두 국가는 1979년 미중 수교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군사 충돌이 빈번하게 진행되었다.

서로에 대한 무력 통일 가능성 때문에 군사충돌이 빈번하여 양안 사이에는 교역이 쉽게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대만은 1965년 9월 대만 행정원 산하에 ‘역행소조’를 설립했다. 역행소조는 국방부장, 재정부장, 경제부장, 교통부장 등 대만 행정부의 수장들이 참여했다. 이들의 임무는 중국과의 경제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었다.¹¹⁾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해외에서 유통 못하게 막는 역할과 함께 대만에 필요한 중국산 제품을 독점하여 대만에 공급했다.

1979년 1월 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만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대만에 ‘3통 4류’¹²⁾ 교류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1980년 3월에는 대만에서 제품을 만들었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국내교역으로 간주하여 관세를 면제했다. 1984년에는 중국은 대만과의 교역이 중국통일을 한 단계 앞당긴다는 생각을 갖고 ‘대만 통일전선 공작의 2단계 계획안’을 마련하는 등의 교역 확대를 추진했다. 1987년 11월에 대만 정부는 중국 내에 거주하는 친지방문을 개방하여 교류를 시작했고 1998년 중국은 ‘대만동포 투자장려규정’을 신설하여 대만 투자자들에 대한 중국 시장 개방과 함께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대만은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었다. 하지만 장징궈와 국민당 지도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만 내에서의 대륙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수용하여 중국과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정책 변화가 있기 전부터 대만 민간에서는 이미 중국과의 교류가 진행되었고 중국과의 ‘접촉’, ‘담판’, ‘타협’을 금지하는 ‘3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양국의 교류가 증가되었다. 통상에 문제가 되는 3통 문제에 대해서 불허 방침을 바로 폐기는 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창구의 다변화를 만들었다.

이들의 관계는 선(先) 교류, 후(後) 협정의 모습을 보인다. 앞서 대만은 1980년대 후반부터 대만 정부가 중국과의 교역을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인정하고 다양한 창구를 마련했다. 현재 진행하는 교류에 대해 금지보다는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교류를 지원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양안회담은 1992년에 처음 진행되었다.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가 처음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 당시의 대표인 왕도함과 고진보의 만남이라 해서 이 회담을 왕고회담이라 했다. 양국가의 교류가 1970년대 말부터 이야기 나왔던 것에 비하면 회담 진행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여기서 대만과 중국의 두 단체인 해협회와 해기회는 민간단체지만 양측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중

11) 손사은,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류 전망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2008, p.13.

12) 3통은 통상·통우·통항을 뜻하며, 4류는 학술·문화·체육·공예를 뜻함.

국의 以民促談,以商圍政노선(민간교류를 통해 정치회담을 촉진하고, 경제교류를 통해 대만정치를 포위한다)과 대만의 以商圍政,以經促民노선(기업을 통해 정치를 제약하고, 경제를 통해 민간교류를 촉진시킨다)이 상호 필요에 의해 양안간의 교역확대 로 이어진 것이다.¹³⁾

2000년 이후 대만 천수이벤 총통은 ‘적극적 개방과 효율적 관리’ 정책과 1993년, 1998년에 이어 2002년 8월 ‘제 3차 남향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대만은 경제적 교류를 증진하면서 충돌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했다. 일례로 대만의 천수이벤 정부가 신헌법 제정을 국민투표에 붙일 움직임을 보이자 양안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는데, 대만 경제인들은 천수이벤 총통에게 즉각 중지할 것을 주장하며 양안 관계의 냉각을 막았다. 대만 정부도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대만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국민투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다.

총통은 2008년 취임과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 준비했고 2010년 양안은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체결 추진부터 체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짧은 시간 내에 체결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대만은 국내경제의 침체와 중국의 對대만에 대한 영향력 확대 때문이었다. 양측은 그 동안 반목과 경쟁의 역사 속에서 양안간의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만남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양안이 상호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¹⁴⁾

제3절 분단국 경제교류협상의 함의

동서독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오랜 기간 동안 일관성 있는 자세를 취했다는 점이다. 서독은 196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고 있었던 최소한 “적대적 협력” 관계를 상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했다.¹⁵⁾ 1982년 사민당에서 기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민당은 사민당의 통일 정책을 계승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으로 말미암아 서독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고 독일을 관리하던 4개국도 서독의 일관된 정책에 호응해 통일을 지지했다.

양안이 주는 시사점은 민간 경제교류에서 확고한 정경분리 원칙이 있었다는 점이다. 양국의 충돌이 경제교류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양국이 심사숙고 하에 마찰을 최소화 시켰다는 점이다.

동서독과 양안의 공통점은 경제교류가 갈등을 해소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교류를 통해 해당 국가들은 경제적 이익과 함께 정치적·군사적 충돌을 막았다. 충돌을 막음으로서 평화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상호 간의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13) 양승주,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How to improve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p.38.

14) 박광득,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의 현황과 시사점’, 대한정치학회보, Vol.18 No.2 [2011], p.179.

15) 조일심,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p.33.

이상의 통일 전 동독과 양안관계라는 두 가지 연구를 분석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남북관계는 국내외적인 다양한 변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상은 비정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과 같은 심각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그것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같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제협상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의 범주에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실익을 위한 전략적인 협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내실 있는 준비에 대한 강조이다. 법적 제도화와 더불어 재정적인 준비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 경제협력은 양측의 단순한 경제교류·협력 차원을 뛰어 넘어 남북관계에 대한 진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판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남북경협은 남북한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산업인프라 공동 조성, 조화된 산업구조 형성, 문화 및 정서의 동질성 회복 차원 등에서 향후 남북통일을 유인하며 또한 통일 후 통일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¹⁶⁾

16) 임강택·임성훈,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특구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6).

3장 남북한 경제교류 협상 현황

제1절 남북한 경제교류 협상의 역사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목적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기회를 확대하여 긴장,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남과 북을 하나로 묶는 수단이며 통일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남북한의 통일은 그 자체보다 통일을 이루어 내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 전체의 삶의 질을 격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상호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혀 남북한 간에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협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¹⁷⁾

그러나 남북협상은 극한적인 냉전구조가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던 1970년대 이전까지 어떠한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테탕트 시대였던 1960년대에 이어서 냉전구조가 와해된 197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가 조성되었고, 남북한 간에도 그제야 대화를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상황변화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월 15일 ‘평화통일 구상’을 선언하였고 이를 계기로 1971년 8월 20일 남북한 간에 최초로 적십자회담이 성사되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남북한 간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역사적 의미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¹⁸⁾

이후 이루어진 각종 분야의 협상 중에서도 경제 분야의 협상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체제 및 이념의 상이성을 극복하고 상호 교류, 협력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써 남북 관계에서도 가장 앞서나갔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1988년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허용하는 7.7선언 이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네 단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류모색기(1988년~1990년)

남북한 경제교류는 7·7선언 이후부터 공식 집계되었다. 이 시기 교역 규모는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경제적인 상호보완성에서도 불구하고 연간 2천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실제교역에 참가한 남한 기업도 소수에 불과했다. 결국 이 시기에 직접투자는 가능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남북교류는 남한의 일방적인 선언을 통해 허용조치가 취해졌고, 북한은 경제교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당시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17) 정영재,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과 과제 =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unification age,’ 동신대학교 대학원, 2007, p.3.

18) 이지용, ‘남북한통일 협상전략 연구 : 북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2000, p.41.

북한의 대외 무역고가 급감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체제의 유지가 더 절박했었고 대남 경계심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정세가 남한기업들로 하여금 북한에 더 관심을 가지게끔 했고, 이것은 즉, 통일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커지고 남한기업들이 북한 시장에서도 개척기업의 독점이윤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했다.

(2) 교역확대기(1991년~1994년)

교역 확대기의 남북한 교역 규모는 약 1~2억 달러를 기록했다.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남한기업들의 관심이 증폭되었으나 이 시기에도 국내적으로 대북 직접투자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남한 기업의 직접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시기에 남북경제교류는 안정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의 시행착오가 많이 줄었고, 일정한 무역패턴을 만들게 되었다. 홍콩, 중국 등의 가상회사(paper company)를 통한 간접교역형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화물선이 북한의 남포항을 출발하여서 공해상에서의 서류 변경을 통해 남한의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형식의 교역이 관례화되었다. 또한, 북한이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북한의 교역규모가 연간 20~30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어 무역상대국도 서방국가로 확대하고, 다원화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북한은 나진, 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해 외자유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남한 기업들이 가지는 부담은 더욱 커져갔다. 남북한 교역수지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이것은 바로 악성채무의 형태로 이어졌기 때문에 남한 기업들은 북한의 환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3) 투자모색기(1995년~2007년)

투자모색기에 남북 교역규모는 연간 3억 달러를 넘었고, 업종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1994년 11월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를 계기로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업인 방북 승인과 협력사업(자) 승인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1995년 남한정부가 10개 사업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협력 사업 및 협력사업자’ 승인 이후 발생한 정치·군사적 사건들로 인해서 대북 투자 사업은 다시 급속히 냉각되었고 승인 건수가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투자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8년 대북 포용정책을 기조로 하는 김대중 정부에 들어선 이후 1998년 제 2차 ‘남북경협활성화조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장관급 회담과 남북경협실무협의회, 남북경협추진위원회 등을 통하여 남북경협과 대북 투자는 투자보장협정의 체결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 가운데 실질적으로 대북 투자를 실행한 경우의 수는 적었고 경협 과정 중에서도 투자 분야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였다.¹⁹⁾

19) 정영재,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경협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 =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unification age,’ 동신대학교 대학원, 2007, pp.21-24.

(4) 경협 검색기 (2008년~현재)

이명박 정부는 기존 두 정권과는 달리 북한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 초강수를 뒀다고 볼 수 있다. 비핵·개방·3000은 북·미 국교 정상화를 지원해 북한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남북 경협을 활성화시켜 남북 간 상생·공영을 실현하려는 정책 대북 지원으로 볼 수 있겠으나, 북한의 반발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맞이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했다. 남과 북의 경제협력은 지난 2010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불허하는 5.24 대북제재 조치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로 들어선 북한의 경제개혁 시도는 각종 정치적인 쟁점에 가로막혀 개점휴업 상태인 남북경협의 돌파구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중단된 남북 간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루어진다면 금강산 관광이 가지는 상징성과 사업성으로 인해 남북경협이 다시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분야별 분석

남북교류협력 사업에는 정부, 지자체, 기업, 민간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계하고 있다. 그 중 정부의 역할은 매우 크고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 후퇴가 정치, 군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규정되고,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나 제도가 아직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화해협력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지속되면서 남북 관계에서 정부 이외에 지자체나 기업, 민간단체의 역할이 매우 높아졌다. 민간단체는 정부의 반대 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같은 경우 정치, 군사적 상황에 정부교류보다 영향을 적게 받고, 지속적이며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작은 규모로 인해서 효과는 비교적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정부와 민간단체의 중간 정도에 위치함으로써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보다는 정치, 군사적 영향을 더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민간단체보다 자체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민간단체보다 큰 규모로 자원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에서의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또한 지자체는 일반 기업과 비교했을 때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지자체는 민간교류의 울타리 안에 속한다.²⁰⁾

(1) 정부교류

1984년 8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남북 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북한 측이 동의한다면 북한 동포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

20) 통일부,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백서, 2009, pp.46-47.

는 기술과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은 이것을 비난하고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연 북한은 남한 지역의 수재민에게 쌀과 천, 시멘트, 기타 의약품을 보낼 것을 발표하고 대한적십자사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북한의 물자는 9월부터 10월에 걸쳐 남한으로 인도되었다.

북한의 수재물자 인도로 인하여 교류, 협력의 분위기는 고조되었고, 1984년 10월 남한은 남북한 경제당국 및 민간 경제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남북경제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북한 역시 동년 10월에는 수락 의사를 보였다.

1998년 7월 7일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이하 7.7 선언)을 발표하여 남북 간의 상호교류를 추진했다. 7.7 선언 발표 이후 북한의 조평통은 즉각 반발하며 자신들의 주장인 남북한 연속회의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1990년부터는 남북고위급 회담이 8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정상회담 무산으로 인해 기본합의서 이행이 중단되었다.

(2) 민간교류

1992년부터 시작된 민간기업의 남북경협은 어려운 조건아래에서도 계속 진행되어서 2005년까지의 승인된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는 68건, 협력 사업은 36건(개성공단 진출 기업 27건 제외)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 승인된 사업은 24건으로 6.15공동선언 이후에 민간 남북경협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남북경협은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이 대표적이며 마지막으로 지자체들의 대북 지원 사업이 있다.

1) 금강산 관광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은 현대그룹 故정주영 명예회장의 통일과 고향에 대한 열의로 인해 추진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정부의 전향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북 포용정책 등이 함께 작용하였기 때문에 추진될 수 있었다. 故정주영 명예회장의 고향인 통천 방문을 계기로 하여 1989년 1월 31일 북한과 금강산 일대, 통천의 시중호, 원산의 명사십리 등의 개발에 합의하였다. 1992년 이후 제1차 북핵문제가 발생하여서 남북관계는 급격히 경색되었고, 금강산 관광 사업은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사업은 민간사업인 동시에 남북교류협력을 이끌어온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대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냈다. 또한 2001년 9.11테러로 인해서 생긴 경계태세 조치와 2004년 조문파동 등으로 인한 남북 간의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사업자들 간의 대화는 끊임없이 지속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모멘텀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경제공동체의 중요한 한 분야로써 입지를 굳혔으며, 향후

백두산이나 개성 등 남북관광 사업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현재 금강산 관광 사업은 파행을 겪다가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2011년 4월 8일에 현대아산이 가진 금강산 관광 독점권 효력취소를 통보했다. 1998년 11월 8일에 유람선인 ‘금강호’의 첫 출항으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 다음해 관광객 억류 사건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이후 계속해서 성장해왔다. 2005년과 2007년 사이에는 영업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사업은 2008년 7월 11일 북한군에 의한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 후에 지금까지 끊겨온 상태다. 2010년 2월 남북이 개성에서 관광재개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또한 4월 남측의 정부 자산을 동결시키고 관리인원을 추방시켰다. 게다가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개성공단 이외 남북교역과 교류를 전면 중단한 ‘5.24조치’를 내놓은 뒤에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는 더 희미해졌다.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사업이 중단 된 이후 2011년 3월 15일, 30일에 금강산으로 현대아산 관계자를 불러내 “북측이 자체적으로 금강산 관광모집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30일에는 이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현대아산 측에 건넸지만 현대아산은 “1998년 금강산 관광 독점권 보장에 어긋난다”며 통지문을 받지 않았다. 급작스런 북한의 태도변화는 ‘외화벌이’가 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현재까지 남북 간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조선적십자회는 2012년 8월 9일 남한에 통지문을 보내 “남측이 이제라도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측 인원들의 금강산 관광길을 열어놓아 상봉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조건부터 마련할 것과 그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자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남측은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와 무관한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연계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의 경우,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결국 남북 간의 관계진전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올해 6월, 개성공단 재개와 맞물려서 관광 재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의 분리, 관광객에 대한 안전보장 및 현금 결제 방식에 양측의 입장차가 확인되어 중단되어 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협상 행태를 보자면 1) 북한에 의한 일방적 통보 및 사건 발생 - 2) 남측 성명 발표 - 3) 회담 제의 - 4-1) 협상 시도 혹은 4-2) 회담 지연 혹은 결렬의 순서를 반복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2) 개성공단사업

2003년 착공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던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과 북한에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 사업이자 한반도 냉전질서를 녹이는 평화사업으로 평가된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공동번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내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외진출을 모색 중이던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가 되었다.²¹⁾ 애초의 계획으로 보면 3단계가 완성되었어야 하지만 현재는 1단계 완성 단계에 그치고 있다.

2000년 8월에 북한과 현대아산의 개발합의로 시작된 개성공단은 총 3단계 발전방안을 세워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핵심 중추로 개발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사업을 시작했다. 04년 4월에 현대아산과 토지공사-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임차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한전, KT 등 한국기업들이 개성공단 조성에 참여했다. 2004년 6월에는 시범단지 15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며, 2005년 9월에는 본단지 1차 계약이 진행되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수요에 맞춰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2007년 12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출범했다.

2009년 5월 북한은 “실무접촉의 잇따른 무산 책임이 우리측에게 있다”는 비난과 함께 개성공단 관련법규 및 계약 무효 선언을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1,2차 개성실무회담이 6월에 진행되었고 이어서 7월에 3차 개성실무회담이 진행되었다. 8월에는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이 북측과 “개성관광 재개와 개성공업지구 사업 활성화” 등 5개 교류사업에 합의를 했다. 9월에는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이 출범되었고, 2009년 12월 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었고 개성공단의 확장에 대한 관심 속에 남북 해외공단 공동시찰이 진행되었다. 다음해인 2010년 1월에는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가 진행되었고 이어 2월에 남북 당국간, 4차 개성실무회담이 진행되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그에 따른 5.24조치 발효로 사업 확장이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거기에 11월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잠정적으로 개성공단 출경차단 조치가 실행되었다. 2011년 4월에 이르러야 개성공단 체류인원이 점진적으로 확대조치되었고 다음해 2012년 1월에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종합지원센터 입주 및 운영 개시가 진행되었다. 이어 올해에는 2013년 3월에는 북한 정전협정 중단 선언과 함께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 단절에 이은 개성공단 통행차단 및 남측 근로자 전원 철수로 개성공단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다. 결국 폐쇄 두 달만인 6월에 남북 당국은 재개 회담에 대한 물밑 접촉을 가졌고 7월에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를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3통(통행, 통신, 통관)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았고 개성공단 체류 인원들에 대한 안전, 문제 발생시 우리측 인원에 대한 기본권 보장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다. 개성공단의 경우, 금강산관광에 비해 양측의 입장조율이 원활하며, 남한 기업인과 북한 주민들의 생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양측의 타협이 원활히 진행되었다.

21) 정영재,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과 과제 =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unification age,’ 동신대학교 대학원, 2007, pp.38-49.

3) 지자체 대북 지원 사업

㉠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모색기(1999~2001년)

지자체의 남북협력 사업은 1999년 1월 제주도가 북한에 감귤 100톤을 지원한 것을 효시라고 볼 수 있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제주도가 나서게 된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구호의 목적도 있지만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감귤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접경도이면서 남북 강원도로 나뉜 분단 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또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강원도는 지자체로서는 가장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조례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강원도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놓았다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 시작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협력 사업에 나섰다. 강원도는 다른 지자체들과는 달리 북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지자체들 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앙집권적 체계인 북한에서 지방정부는 우리와는 다르게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들 간의 자매결연 방식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추진기(2002~2005년)

지난 모색기를 지나면서 남한의 지자체들은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을 보이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제주도와 강원도 이외에도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뒤이어 대북지원 사업에 나섰다. 이 시기에는 주로 농업분야에 관련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시기에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비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할 수 없는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였다. 이에 지자체들은 오랫동안 북한과 관계를 맺어온 대북지원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간접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해당 지자체가 주도해서 설립한 민간단체나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해당 지자체와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순수 민간단체, 서울에 근거를 갖고 있는 전국적인 민간단체들이 대표적이었다.

㉢ 개발지원 사업으로의 전환기(2006년~현재)

2005년에 들어서면서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황과 오랫동안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서 인도적 지원활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사실상 인도적 지원은 긴급 상황과 구호활동이 중심이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기가 힘든 것인데, 대북지원은 북핵문제 같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개발지원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인도적 지원이 장기화되는 기형적 모습을 띄게 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은 국제사회가 개발지원으로의 전환문제로 대립하고 있었고, 남한에서도 이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을 개발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북한의 제도 및 정책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개발지원을 허용한다는 것이지만, 남한은 시범적인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높이고 그 이후에 그에 따른 제도 및 정책의 변호를 도모하자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2006년에 지자체들은 단순한 물자지원 사업보다 개발지원 성격을 띠는 사업 추진에 힘을 쏟았다.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는 핵심적인 행위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농촌 분야의 사업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지원 사업에도 나서는 등 탄탄대로를 걷던 사업은 2008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이 농촌 개발 지원 사업 중단을 요구하면서 무산되었다. 북한은 개발지원적 성격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가 이런 사업들이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중단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봤을 때 남한의 지자체들은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을 고려해 프로젝트를 개발해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설득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²²⁾

제3절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특징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체제개방을 외치면서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있지만 체제붕괴를 우려해 공포 했던 계획마저도 회귀하는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체제대결에서 체제방어를 위해 남북한 협상에 나서고 있는 북한은 남한을 협력 상대로 인식하고 최대한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남북은 다른 분야의 협상과는 다르게 경제교류 협상에 있어서는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상호 친밀한 관계를 보였다. 경제난을 타개하는데 남한의 자본과 기술은 북한 지도부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당근 역할이 되는 것이다.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정경분리 원칙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점이다. 체제안보에 있어서는 예전과 같이 한 치도 양보 못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왕자씨 피살사건처럼 북한은 군부의 잘못된 점을 사과하지 않고 경제적인 실리인 금강산 관광을 포기했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서 발생했던 북한의 경제난은 모든 공급경제 부문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난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진행된 것이며, 따라서 북한도 이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더 이상은 경제교류와 협력, 협상을 하지 않고서는 체제의 붕괴까지도 이어질 수 있음을 자각하고 경제에 매달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정치, 군사협상에 비해 경제협상에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

22) 통일부,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2009, pp.49-78.

이는 것이다. 이는 경제협상은 곧 자신들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좋은 창구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협상 자체를 협정의 체결보다는 협상 과정의 그 자체를 이용한다. 북한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기보다는 엄밀한 협상가격을 정해놓고 그 유리한 합의에 도달하는데 저해되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간다. 군사, 정치협정에서 주요 군사·정치적 내용이 아닌 다른 것을 곁들여 요구하는 것보다 체결만 된다면 자신들에게 실리가 되고 요구하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경제협상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4장 북한의 협상기법 분석 및 평가

제1절 북한의 대남 협상기법 특징

북한 체제를 설명하는 수령제, 유일체제, 전체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조직은 최고 지도자의 의사에 속해있다. 이것은 협상과 관련된 조직에서도 이 원칙에 입각하여 하향식 구조를 이룬다. 결국 협상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정책적 자율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북한은 협상을 현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수단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으로 보는 중·소의 협상관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그들의 특수한 정치문화로 인하여 상인이라기보다는 전사적인 행태를 취하며 대화에서 타협과 양보를 통하여 상호 충돌되는 의견과 이익을 조정하기 보다는 타협과 양보를 기피하며 서방권의 일반협상행태보다 공산권의 전통적인 협상행태와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

특히 과거 북한은 남한과 협상을 할 때 다른 나라보다 더욱 강경하고 적대적인 전사적 협상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남한이 일반적인 외국이 아니라 통일의 대상인 ‘공화국 남반부’이며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달성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한 당장의 이익보다 제로섬(zero-sum) 원칙에 입각하여 ‘한 수 높은 전술’ (one-upmanship)과 맞대응식 협상에 집착했기 때문이었다.²³⁾ 반면 김정일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점차 남한을 경쟁자나 위협대상으로 보기보다 동반자 또는 협력자로 인식하고 개방적 사회주의 노선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장관급 회담에서는 기존의 고수해오던 적대적인 협상행태로부터 상당한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²⁴⁾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이미 합의된 의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입장을 정해놓고 이것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남북대화나 북미대화에서 북측 협상대표가 ‘군부의 반대에 의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는 군부의 반대가 존재한다기보다는 군부를 핑계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협상 전술이라고 보면 된다.²⁵⁾

또한 협상 현장에서 새롭게 생겨난 의제는 그게 비록 아주 사소한 사안일지라도 이를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 이러한 경우에 상부의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결정이 나지 않으므로 시간의 소비가 크다. 북측 협상 대표가 미리 위임받은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

23) 송종환, 북한의 협상형태에 관한 연구 : 남북한 당국 간 대화를 중심으로 =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r : focusing on the inter-Korean governmental talks,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2, pp.120-122.

24) 김정혁, ‘김정일의 인식과 대남협상행태 연구 = Kim Jong-il's perception and a study on North Korea's negotiating behavior against South Korea’,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p.93.

25) 최용환·권은주, ‘남북 협상기법 연구 = Negotiating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 Local-Government's Perspective’, 정책연구, Vol.2008 No.10, [2008], p.23.

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남북협상이나 대외협상에서 결정은 자주 지연되고 심지어는 이미 확정된 사안 중에서 최종합의문에 새로운 용어나 표현이 삽입되는 경우도 현장 결정은 하지 못한다.

북한은 이해가 상반되는 합의 절대 불가영역을 설정해 놓고 협상을 이용한다. 의제의 합의도출 보다는 의사협상을 진행해서 ‘협상을 위한 협상’을 추진한다. 공동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분배적 협상을 추구한다. 또한 자신들의 입장을 중시하는 것만을 지속함으로써 상대방의 계속적인 양보를 요구한다. 협상전략에서도 지나친 경쟁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태도를 취한다. 양보불가, 회담결렬이 그 하나의 예가 된다. 상대방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등의 전술을 구사하고 실제로 위협전술로 실질적인 손실을 입히기도 한다.²⁶⁾

또한 벼랑 끝 외교 전술을 구사하면서 의제 선정에 있어서는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포괄적인 접근법으로 시작해서 원칙적인 합의로 종결시킨 후 이슈를 분할시켜 상대적인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게 흔하다. 전반적인 협상에 있어서 상대방의 국가가 협상에 나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협상을 유도한다. 이것은 양국 관계의 기본이 되는 규범과 규칙을 지키기 보다는 위반하고 위반협박을 함으로써 상대측을 다급하게 만들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한다.²⁷⁾

특히 경제협상에서는 북한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리를 안정적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지에 큰 관심을 둔다. 경제적 이익이 많은 사업일 경우 적극적인 태도를 띤다. 다만 그것이 집행되는 방식이나 지역이 북한체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경우에는 경제 실리는 그대로 관철하되 방식과 지역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가 많다.

(1) 북한의 대남 경제 협상 기구

북한의 대남 경제 협상 기구는 당 산하와 내각 산하로 구분 할 수 있다. 당 산하에는 통일전선부가 있고 그 하부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이 존재하고 내각 산하에는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가 있다.

1) 통일전선부

조선노동당 산하 기관이다. 북한에서 진행하는 대남사업 핵심기관으로 대남사업을 전반적으로 기획한다. 1978년에 설치되었으며, 남북회담, 해외교포공작사업, 대남심리전 및 통일전선 사업, 국내 좌익운동권 지도 등을 관할한다.²⁸⁾ 김정일이 생존했을 때

26) 박규복, 협상론을 바탕으로 한 6자회담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2011, p.13.

27) 박규복, 협상론을 바탕으로 한 6자회담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2011, pp.17-18.

28) 최용환·권은주, ‘남북 협상기법 연구 = Negotiating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 Local-Government's Perspective’, 정책연구, Vol.2008 No.10, [2008], p.36.

는 대남사업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통전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사안도 김정일에게 보고될 수 없었으며, 통일전선부가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전선부는 확대, 개편됐다. 기존의 1,600명 인원을 2,500명으로 증원했으며 경제, 철학, 역사 분야 학자 등을 통해 인력을 충원했다. 이는 각종 남북대화를 대비하는 동시에, 북한의 민간인들을 대남접촉에서 철저히 분리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²⁹⁾

2)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대남 사업을 주도하는 당의 외곽단체이다. 조평통은 1961년 5월 13일 결성되었다. 북한 사회 전역에 걸친 인사들이 조평통에 가입했으며 월북 작가인 홍명의를 위원장으로 33명의 준비위원회가 조직을 만들었다. 조평통의 기능과 임무는 남한 각계각층인사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적화통일 실현 투쟁 고취 및 선전활동 전개, 노동당의 통일 및 남북대화정책 대변과 실질적인 통일 대화업무 추진, 남한 내 주요 사건 발생 또는 새로운 정책 제시 때 북한 측의 입장 표명 등이다.³⁰⁾

조평통 간부들은 당정치국원, 당비서 등을 겸직하고 있다. 1998년부 위원장직을 수행하던 김용순이 2003년 사망한 이후에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공식으로 두고 있고 현재 부위원장은 6명이 수행중이다. 남측의 정세변화에 따라 즉각적인 논평을 내는 곳이 조평통이다. 이들은 노동당의 지도도선에 따라 움직인다.

3)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원회)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이다. 아태위는 김용순 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위원장으로 하여 1994년 10월에 창립되었다. 현재 위원장은 김양건이다. 아태지역에서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이 지역민들의 사회정치적 경제적 발전에 유리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폭 넓고 다양한 활동을 적극 벌여나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997년 5월에 내각개편으로 외자유치 업무를 관할하던 대외경제협력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아태평화위원회가 외자유치 업무를 인수하였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는 참사 이상이면 대외적 서명권을 가지며, 사안별 업무분담과 형평에 따라 책임참사가 결정돼 모든 사안을 참사들 간의 협의로 결정하는 독특한 업무협조 구조를 가지고 있다.

4)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이다. 민족화해협의회는 1998년 6월에 창립되었다. 정계, 사회, 문화, 종교 등 북한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이 구성해서 만들었다. 1998년 8월 15일 대축전을 제의하기에 앞서 만들었으며 북한이 민족화해를 앞세워 결성한 최초의 단체

29) 허문영,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 지속과 변화, 통일연구원, 2005, pp.124-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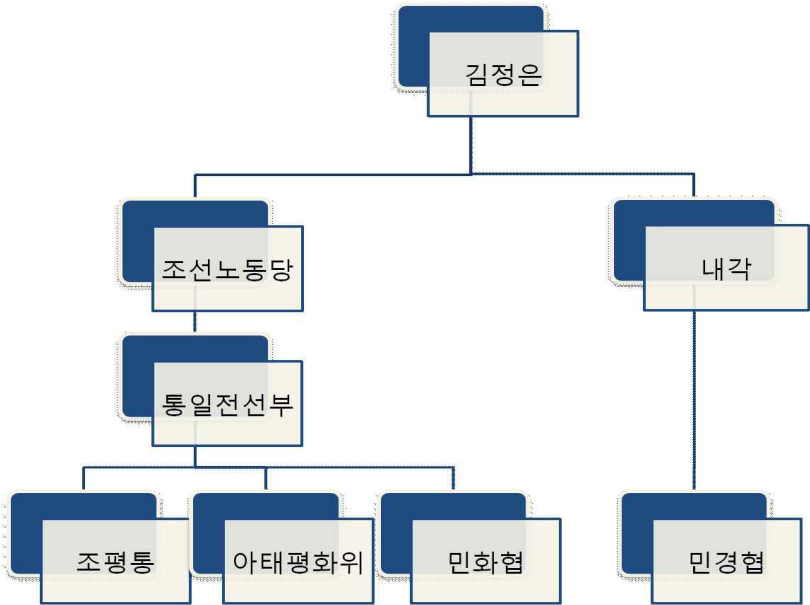
30) 이성구, 김정일의 대남정책에 관한 연구, 人文科學(HUMANITIES), Vol.13 No.- [2005], p.84

이다. 아태가 담당하던 일부 사업이 민화협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 외곽 단체이기 때문에 단독적인 행동이 불가하며, 통일전선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5)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내각 산하 기관이다.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2004년 6월 9일 내각 산하에 민경협을 신설하였다. 남북경협을 담당하는 것³¹⁾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에게 초청장을 발송해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2005년 6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우리 민족 공동의 통일강령인 6.15 북남공동선언의 이념에 따라 북남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경협을 발족했다고 했다.

<그림 4-1 북한 대남 협상 기구>



제2절 경제 분야 협상 접근 방법

(1) 남한의 사업 제시

남측이 제기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북한 측이 관심이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북측의 수용 가능성과 호감도에 따라 북측의 사업 협상 진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 측에서 제시한 사업에 대해 북측이 호감을 갖고 협상을 임한다면 터무니없는 요구 조건 대신 양측이 합당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다만 북측은 쉽게 제안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검토나 고려 등을 명분으로 시간을 끌면서, 상대방을 초조하게

31) 허문영,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 지속과 변화, 통일연구원, 2005, p.128.

만들어 다음 협상에 임함으로써 양보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³²⁾

다른 방법으로는 협상 시 북측이 원하는 최대 목표를 내세워 남측과 협상에서 서로 양보를 유도하여 적정 목표를 유도하는 것이 있다. 협상 초기에는 북측 대표들이 협상에 임하기 전 요구조건을 제시하는데 남측에서 수용하지 않을 시에 협상 결렬도 불사한다는 강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 강경 입장을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최대한 제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숨겨야 하는 것이다. 북한 측은 우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더 많은 것을 요청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측에서 협상에 대해 호감을 갖는다고 하여 덥석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협상에서 북한 측의 무례한 태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북한 측의 협상 카드를 알고 차후 북한 측을 분석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반대로 남측에서 제시한 협상에 거부감을 갖는다면 북측은 터무니없는 요구 조건을 내걸고 협상에 임하여 요구조건에 대한 타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측이 원치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북측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게 되고 우리 측의 협상 가이드라인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또한 무리한 요구사항을 계속 들어주게 된다면 차후 협상에서 북한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 제시하게 될 것이다.

(2) 북한의 사업 제시

북한이 먼저 사업을 제시할 때에는 우리 측에서는 북한의 사업 의도와 성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정책결정자 수준에서 기획된 제안인지 그리고 경제적 목적 이외에 정치적 의도는 없는지 또한 다른 제안을 위한 예비적인 제안인지, 아님 타결을 원하는 제안인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³³⁾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회담 외에도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협상 사안의 실세와의 이야기가 중요하다. 북한은 당에 위치한 사람이 공식 실세이다. 통상 북측 대표단은 경제 실무단보다는 당 조직인사가 협상의 키(Key)를 쥐고 있기 때문에 당 조직인사와 이야기를 통해 협상을 파악하는 것도 협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방안이다.

또한 북측의 의도와 성격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수용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수용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북측에 단호하게 불가 통보를 보내야 북측에서도 사업 진행을 위해 현실적인 협상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의 조건이 북측에서 수용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를 통해 북측과 다른 사업을 연계 진행 가능성을 타진해봐야 한다.

내부에서는 사업 진행을 통한 국내 여론의 찬반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남북 교류가 통일과정에서 지속되어야 하지만 무리한 추진은 남북갈등을 유발 시킬 수 있는 측면제와 같다. 모든 국민들이 합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협상 조건을 생각해야 한다.

32) 최용환·권은주, '남북 협상기법 연구 = Negotiating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 Local-Government's Perspective', 정책연구, Vol.2008 No.10, [2008], p.67.

33) 최용환·권은주, '남북 협상기법 연구 = Negotiating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 Local-Government's Perspective', 정책연구, Vol.2008 No.10, [2008], p.68.

제3절 북한 경제 분야 협상 측면에서의 태도

(1) 경제적 실리를 강조

북한의 화두는 먹고 사는 문제이다. 김정은 4월 15일 태양절 열병식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경제부문에서 변화를 예고했다. 그리고 6.28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경제체제를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부분 변화시킬 것을 예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여 최대한 이익을 확보할 것이다. 경제 회담에서는 그 점을 인지하고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설명하면서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북측이 남측보다 경제 실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협상이 장기전으로 가면 불안한 것은 북한이지 남한이 아니다.

다만 북한은 동구권의 몰락을 보면서 경제적인 실리는 추구하지만 그들의 영향력 약화는 원치 않는다. 그 예로 수많은 대북 지원 속에서 북한은 남측의 모니터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모니터링을 수용 할 경우에 북한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북한은 모니터링을 받지 않고 있다. 경제적 실리를 강조하면서 북한 측에는 당의 지배성이 절대 떨어지지 않음을 강조하여 북한 측을 설득해야 한다.

(2)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남북한은 서로 상이한 체제 속에서 60여년 넘게 살고 있다. 분단 된 세월 속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협상 시에 단어 선택에도 많은 혼선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남북한 사이에 이질화된 문화들이 많아 졌기 때문에 협상장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로 상대방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특히 북한은 한자, 영어 표현에 있어서 취약하다. 2013년 남북은 거래말큰사전을 발간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협상에서 서로 단어 사용에 대한 혼선을 피하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발언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사석에서 북한 대표단을 상대할 경우에도 함부로 북측 최고 지도자에 대한 발언을 삼가야 한다. 다만 ‘세기와 더불어’ 같은 최고지도자의 저작집이나 북측 최고지도자가 만든 논문 내용을 숙지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은 도움을 준다. 협상에서 북측 협상단이 남측에 불리한 조건이면서 동시에 저작집에 반하는 내용을 언급할 때 좋은 반박의 예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지도자의 말이 가장 힘 있는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말에 반하는 협상대표는 없다.

(3) 이전 협상 기록의 숙지

협상의 시작부터 합의문 작성, 사업 이행 단계, 사업 평가 단계까지 어느 하나 중요

하지 않은 것은 없다. 사업의 전 과정을 이해하면 협상을 선점 할 수 있다. 합의문 마지막 단계에서 북한 협상단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문건을 넣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합의문 이후 사업 진행에서 북한의 시간 끌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약속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협상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면 협상장에서 북측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전 협상 기록을 충분히 숙지하고 나가야 한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북한의 협상 담당자는 오랫동안 한 일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협상 기록을 보면 북한 측의 협상 패턴을 읽을 수 있다. 북측 협상 담당자가 과거 협상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전 협상에 대해 번복하려 하면 우리 측 협상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쳐야 한다. 반론을 적극적으로 펴지 못하면 수세에 몰릴 수 있다.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지 위해서는 협상에 나서기 이전 우리 측 협상 기록을 확인해 협상 상대방을 파악하면 좋다.

(4) 국내여론에 대한 설득과 합의

남북교류는 안보문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금도 남북 교류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판하는 국민들을 볼 수 있다. 남북 경제교류가 북한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인식하는 국민들도 있다. 이렇게 경제교류에 부정적인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합당한 협상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북한은 최고지도자 말 한마디에 국가의 운명이 변할 수 있지만 남한은 그렇지 않다. 남북 교류 가운데서 사업 진행시 투명한 거래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에서 깨끗해져야 한다.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진행을 하면 국내여론은 남북 경제교류에 대해 따가운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 볼 것이다.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업은 지속성을 띄기 어렵다. 합의를 통해 진행되지 않는다면 훗날 남남갈등을 일으킬 촉매제가 될 수 있다.

(5) 협상 전문가 양성

경제 협상을 전담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북한과 협상을 진행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목소리 내는 부문은 바로 전문가 육성이다. 한 두 번의 만남의 경우에는 북한 측 실무진이 우리에게 대해 경계하여 선뜻 대화의 진행을 주저한다고 한다. 협상 상대에 따른 전문가를 꾸려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협상을 진행한 실무자들은 북한 측에서는 실무자가 부서 변동 없이 지키고 있어서 경험에서 많은 취약점을 보인다고 말한다. 남북대화의 경우 북한 측은 대표자가 그때그때마다 다른 모자를 쓰고 나오는 정예 대남사업전문가들인데 반해 한국 측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표단의 구성이 대폭 교체되었으며 과거 정부 전문가들에게는 남북대화 관련 정책 수립 시 자문역할로도 기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³⁴⁾ 이런 협상의 전문성으로 봐서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우위에 있다. 우리도 경

34) 송중환,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 오름, 2002, p.309.

제 협상을 전담하는 전문가를 육성시켜 협상의 첫 테이블에서부터 기선을 제압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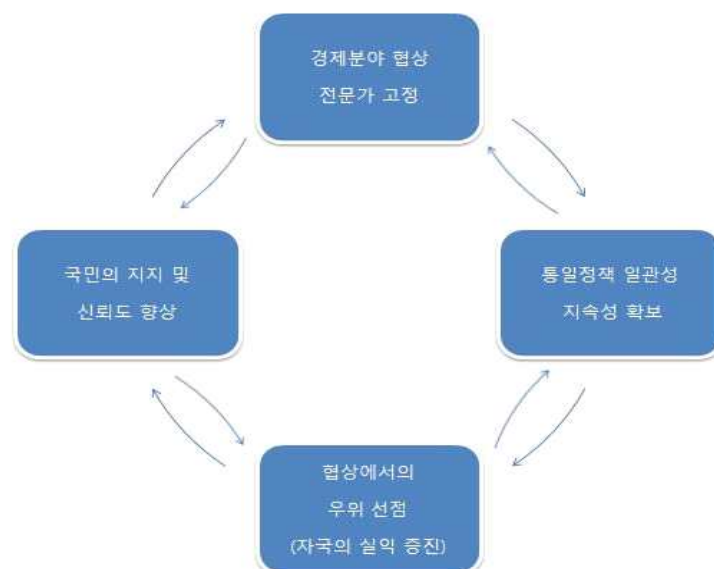
현재 통일교육원에서는 남북교류협력요원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반 과정에 들어가면 북한 체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협상에 대해 3일 동안 교육을 받는다. 3일 만에 노련한 북한 협상 담당자를 상대하기 위한 협상 능력 향상은 얻기 힘들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북한 관련 대학원에 입학하여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과 협상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나 시간과 비용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또한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도 정부나 기업에서는 협상 담당자에 대해 특수직 인정 하지 않고 부서별 순환 보직 근무를 통해 1~2년 정도 근무 후에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아 전문성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협상단에 대해서는 특수직 근무를 인정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이론과 실무를 겸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할 것이다. 또는 지원자를 북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 바로 현장에 투입 할 수 있는 정예 요원을 선발해야 한다.

5장 결론: 정책제언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다. 본 의미는 적의 사정과 나의 사정을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이긴다는 뜻이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주

<그림 4-2> 경제 분야 협상전문가의 육성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선순환 모델



체가 되는 인물이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 북한의 입장과 전략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다면, 북한 측에서 대표로 선발된 협상 대상자 역시 분석 대상이 되며, 이는 협상의 준비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협상 특히 경제 분야의 협상을 위해서 남한 측의 북한 전문가를 양성, 그 중에서도 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꾸준히 양성시키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기타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협상이라는 것은 눈앞의 실익만을 좇는 것만이 최선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시적인 관점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양보와 이익을 선택할 수 있겠다. 즉, 최선이 아니면 차선, 최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차악을 선택하는 기술이야말로 협상의 진정한 우위를 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장한 협상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첫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기존의 북한의 전략과 현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남한의 대표라면, 북한의 현재 요구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파악할 것이며, 이를 통해 취사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의 측면에서 정치적인 부분과 분리될 수는 없겠지만, 개성공단의 사례처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화채널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협상에서의 결렬은 신뢰성을 상실하고, 당사자국은 물론 주변국의 상황까지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평화지수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협상의 기법의 개발이야말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화채널을 지속·유지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대화채널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 일관성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서독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정권의 변동에 따라 통일정책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협상의 당사자들이 역으로 정책입안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북한을 합리적인 목적을 가진 일반국가의 성격을 지닌 국가로서의 의무와 자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협상기법의 활성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외교적인 장점은 북한의 외교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정치·문화·심리 등의 측면에서도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대응방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인 협상전략을 공유 및 학습시킴으로 인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의무와 권리 역시 학습 및 견지시킬 수 있으며 남북관계에서 상호간의 신뢰성(credibility)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송중환, 2002.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 오름.
통일부, 2009.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허문영, 2005.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 지속과 변화』, 통일연구원.
임강택 · 임성훈, 2006.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특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 학위논문

- 김정혁, 2003, '김정일의 인식과 대남협상행태 연구 = Kim Jong-il's perception and a study on North Korea's negotiating behavior against South Korea',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규복, 협상론을 바탕으로 한 6자회담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손사은,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류 전망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송중환, 2002, 북한의 협상행태에 관한 연구 : 남북한 당국 간 대화를 중심으로 =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r : focusing on the inter-Korean governmental talks,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영재, 2007,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과 과제 =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unification age,'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조일심, 2009,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양승주, 2011, '남 · 북한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How to improve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지용, 2000, '남북한통일 협상전략 연구 : 북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이용중, 1999, '북한의 대남 경제협상 행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conomic Negotiation Behavior of North Korean', 東國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최성근, 2009, '민족내부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에 관한 연구 : 동 · 서독간 '내독거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동서독간 '내독거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3. 학술지

- 박광득, 2011,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의 현황과 시사점', 대한정치학회보, Vol.18 No.2 2011.
- 정진상, 2006, '통일전 동·서독간 경제교류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Vol.16 No.1 2006.
- 이성구, 2005, 김정일의 대남정책에 관한 연구, 人文科學(HUMANITIES), Vol.13 No.- 2005.
- 최용환 권은주, 2008, '남북 협상기법 연구 = Negotiating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 Local-Goernment's Perspective', 정책연구, Vol.2008 No.10,
- Putnam, Robert D. 1993,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2, no.3, 1993.

4. 뉴스기사

- 김종효, 김정일 유언 공개 “핵무기,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계속 개발, 중국 경계하라”
Newsen, 012.04.13,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4131645391001

김정은 정권 2주년 집중 분석

-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과 향후 변화가능성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자이온

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대상 및 방법

2장 김정은 정권의 성립과 행보

1. 김정은 정권의 성립
2. 지난 2년간의 행보

3장 김정은 정권의 특징

1.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정권의 차이점
2. 김정은 정권의 특징

4장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 분석

1. 김정은 개인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2.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

5장 김정은 정권의 변화 가능성

1. 리더십을 통해 본 변화 가능성
2. 북한 내부 요인을 통한 변화 가능성
3. 북한 외부 요인을 통한 변화 가능성

6장 결론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임을 대내외적으로 공식화 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은 2012년 4월 미·북·베이징 합의를 파기하고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3호)을 발사하였으며, 당규약과 헌법개정¹⁾을 통해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합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사상으로 선포하였다. 2013년 새해 공동사설에는 핵·경제 병진노선 제시하고 핵개발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식화 하였다. 특히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되고, 남북한 안보적 핵 위협을 통한 긴장의 수위를 높인 반면 북·중 무역과 개성공단의 재개와 같은 경제적으로 실리적인 면에서는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성립과 행보과정에서 정권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 검증 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북한 정권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안보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최근 북한 전문가들 속에서 장성택의 처형은 김정은 정권이 권력공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체제 안정화가 곧 이루어 질 것이라는 분석과, 체제의 불안정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분석으로 나누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 검증 과정과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을 탈북 대학생의 입장에서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성립과정과 지난 정책행보 과정에서 나타나는 리더십을 분석하고, 김정은 체제의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본 연구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 대상 및 연구의 구성에 관해서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성립과 김정일 사후 북한의 정책 행보를 분석 한다. 제3장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특징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하우스의 리더십 이론에 근거한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 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을 통해서 본 변화 가능성과 내·외 요인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논의한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논문들을 요약정리하고 결론을 맺는다.

1) “北,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 명기(종합)”, 연합뉴스, 2012. 5. 30일자.

제 2 장 김정은 정권의 성립과 행보

1. 김정은 정권의 성립

북한은 체제 면에서는 사회주의 체제, 정권 차원에서는 김정은 정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수령의 절대적 권력이 행사되고 있는 북한의 실정에서 굳이 체제와 정권의 분리는 무의미하다.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 체제를 의미하고, 김정은 체제는 북한 체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논문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성립을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 발병 일부터 2012년 4월 11일 당대표자 회의까지로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²⁾되면서 김정은의 등장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김정일의 계속되는 건강악화는 후계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시급함과 함께 김정일의 후계자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권력구도를 만들어 놓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김정일이 김일성이 살아있는 동안 후계자로 내정된 것과 같이 김정은도 김정일이 살아 있는 동안 내정되고, 후계자 수업을 받은 것이다. 다만 김정은의 경우 김정일의 후계자 선정에 이은 후계 체제의 이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김정은 체제의 시작은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등장하기 시작한 때부터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2009년 1월 8일 ‘조선로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김정은을 김정일의 후계자로 공식화하였으며 이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당 규약의 일부를 개정하기도 하였다. 2010년 9월 28일 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군 대장칭호와 함께 당 중앙군사위 1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김정은 정권은 시작되었다³⁾. 김정은의 당 중앙군사위 1부위원장 임명은 김정일의 유고시 김정일을 대신하여 비상사태를 책임지는 동시에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⁴⁾ 행사할 수 있는 절차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김정은 체제가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30일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됨으로서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통수권자로 등극하였고, 이후 2012년 4월 11일(4차 당대표자회의) 당 제1서기, 이틀 후인 13일(최고인민회의)에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오르면서 북한의 군·당·정 3권을 장악하였다. 이것은 김정은이 김정일의 총비서직, 국방위원장직을 그대로 두고 당 제1비서,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승계한 것이다. 이처럼 김정은 체제의 성립은 유헌통치 방식으로 구조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었던 김정일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안정적으로 계승되었다.

2) 2008년 8월 뇌졸중 발병.

3) 김정은은 2010년 11월 6일 조명록(국방위 1부위원장, 총정치국장) 사망당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총 171명)에서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내각 총리), 리영호(인민군 총참모장)를 제치고 맨 앞자리에 올랐다. 비로써 김정일 위원장 다음으로 이름을 올리며 북한 권력의 2인자임을 증명하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2010년 11월 7일. 2009년 1월부터 국가안전보위부 수장으로 있으면서 후계 구도에 맞게 측근들의 관리와 인사담당에 관여하였다. 김정은 시대 전방. 2012. 거래일통일연대 자료. p. 7.

4) 김정일 대신하여 군 최고사령관으로 내정될 수 있는 절차적 의미를 갖는다.

2. 지난 2년간의 행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순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실제적인 통수권자인 김정은의 정치적 행보와 북한의 정책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지배엘리트 권력의 파격적인 인사이동으로 자신만의 권력기반을 다지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성립 이후 지금까지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 신임했던 군부의 권력서열을 파괴하고 당 관료 출신들을 앞세운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초기에 김정일의 운구차를 호위한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1부부장)과 이영호(총정치국장)를 제거하고 당 관료 출신⁵⁾들을 당과 군 요직에 등용함으로서 새로운 권력구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현재까지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작전국장 등 4대 군내 핵심직 전원을 포함하여 黨·政·軍 주요 간부 218명 중 절반 가까운 97명(44%)이 교체되었다⁶⁾. 지난 12월 12일에는 김정은 정권의 2인자 역할을 해오던 장성택을 처형이라는 자충수를 두면서까지 북한 내에 완전한 유일(독제)체제를 확립하였다. 이처럼 김정은은 정권의 안정을 권력구도의 개혁으로부터 시작하여 군부와 당의 지도력을 공고히 하면서 유일지도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둘째로 김정은 정권은 핵카드를 “대미 협상용” · “체제 결속용” · “대남 전략용”으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2년 4월 13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광명성 3호’로 명명되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상, 경제, 군사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대내외 선전에 주력해 왔다. 2013년 2월 12일에는 추가로 3차 핵실험에 이어, ‘영변 핵시설에서 핵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영변의 5MW급 가스흑연 원자로가 재가동 하고 있다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서 포착이 되었다⁷⁾. 특히 김정은 정권은 핵카드를 이용하여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켜 전략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

셋째로 경제적 안정의 출구를 점진적인 개혁 개방에서 찾으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2년 4월 당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당기관의 역량을 대폭 확충하고 군보다는 당·내각을 중심으로 경제재건에 박차를 가했다. 2012년에는 6.28경제개선 노선을 제시하고 농업을 중심으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였다. 2013년 상반기에 들어서면서 공장들이 외환계좌 신설을 허가하고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의 권한을 부여해 주는 등 새로운 경제개선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장성택 일당이 우리 경제에 큰 해를 끼쳤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⁸⁾”이라며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북한의 입장을 설명한 북한 고위관료의 말은 북한의 경제개선 정책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5) 장성택(북한군 차수, 국방위 부위원장), 최룡해(북한군 차수, 총정치국장),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출신들이 아닌 김일성종합대학 출신들을 위주로 한 당 중앙군사위 출신.

6) 안준호·박수찬, “김정은 집권 2년 만에 혁명세대 다 내쳐”, 『조선일보』, 2013.12.04, 4면.

7) 조영빈, “北 영변 核 재가동, 금강산관광에도 악영향”, 서울:뉴스1, 2013. 09. 15,

8) 조희선, “北 개방적 경제정책 어떤 변화도 없을 것”, 『서울신문』, 2013.12.16, 4면.

제3장. 김정은 정권의 특징

1. 김일성·김정일·김정은 후계구축 과정에서의 유사성과 차이점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라는 명목아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의 3대 세습과정을 거치면서 군주국가, 독재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세습 과정과 유사성이 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정치권력세습이 혈통요인에 의한 후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김정은도 혈통요인에 의한 후계자 선정과정을 거치며 세습된 것이다. 김정일이 김일성이 살아 있는 동안 후계자로 내정된 것처럼 김정은도 김정일이 살아 있는 동안 후계자로 내정되어 후계 수업을 받았다. 20년 이상 후계자 수업을 받는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의 후계자 수업이 시간적으로 짧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나름대로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해 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카리스마가 북한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던 시기에 근 20년이라는 장시간에 걸쳐 자신만의 권력기반을 확보하였다. 김정은도 김정일이 생존해 있던 2009년 하반기에 후계자로 선정되어 2011년 12월 까지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 북한의 권력 세습과정에서 후계자에 대한 우상화 작업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⁹⁾. 이러한 우상화 작업은 혈통승계, 수령승계에 의한 후계체제 구축에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여해준다. 북한 체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선거방식이 아니라 권력세습이라는 점이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김정일은 김일성의 절대적 권력의 보호 아래 20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을 동행하면서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¹⁰⁾.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작업은 장기간에 걸쳐 철저한 공고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은 자신의 견제세력들에 대한 수차례의 숙청 과정을 거치면서 독보적인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러므로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국정을 통치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으며 군 권력의 인사이동도 없었다. 또한 김일성의 카리스마적 리더십도 김정일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절대적인 복종과 숭배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시장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자본주의 시장적 요소가 잠재되어있는 상태에서 정권을 물려받은 것이다. 북한 주민들 속에서 한국 드라마나 노래가 유행하고, 한국 제품이 선호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사상적 의식이 ‘동요’를 넘어서고 있는 것도 현실

9)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공식화되기 전인 2009년 하반기에 노동당 중앙당 간부들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김정은 선전자료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에 대한 위대성 교양자료”는 김정은을 ‘청년대장’, ‘김대장’으로 부르면서 ‘백두산형의 장군’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선전자료는 김정은을 김정일의 “선군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군사의 영재’란 점을 부각시키면서 ‘장군형의 위인’이라고 주장했다(고유환, 2011. 김정은 후계구축과 북한 리더십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5호).

10) 김정일은 대학졸업과 동시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들어가 1967년 당 선전선동부장이 되었으며 1972년 12월 당 제5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비밀리에 후계자로 결정됐다. 이어 북한은 1974년 2월 12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 결정했다(이상우, 2008. 북한정치 ‘신정체제의 진화와 작동원리’. 나남출판사)

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정권은 사상적으로 건전한 주민의식을 바탕으로 했다면 김정은 정권은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익숙하고 문화적으로 개방된 주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김정은 정권의 특징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김정일이 신임한 군 관료들의 파격적인 인사와 대내외적인 언론 공개, 경제개선을 위한 내각기능의 활성화 등 모든 정책적 사안들은 체제안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2년 1월 15일 당 대표자회의를 기점으로 김정은 체제의 특징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김정은 정권은 후계 “구축(building)” 과정을 지나 “공고화(consolidation)” 과정을 거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초기 체제 구축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정책 노선이나 정체성 측면에서 뚜렷한 철학적 비전을 보여 주지 못하는 듯 했다. 하지만 2013년에 들어서면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제시하고, 군부와 당의 권력인사이동을 통해 정권의 핵심엘리트들을 김정은 자신의 측근들로 교체하면서 공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둘째, 김정은 정권은 과거 김정일 정권에서 고수해온 ‘선군정치¹¹⁾’의 연속선상에 있다. 북한에서 군인들이 북한의 주요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고, 김정은의 현지시찰시 최룡해를 비롯한 군관료들이 여전히 동행하는 모습들은 당중심의 경제발전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의 ‘핵’은 ‘군’을 아우르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군 중심의 경제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김정은 정권은 시장친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은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 대형 쇼핑몰을 대대적으로 건설, 운영하고 있다. 주민시장의 제한적 활성화를 승인하고, 외부투자 유치¹²⁾¹³⁾에 집중하고 있다. 핸드폰 시장의 전국적인 확대가 김정은 정권의 시장친화정책을 잘 입증해주고 있다.

11) 이상우, 『북한정치‘신체제의 진화와 작동원리’』, 나남출판사, 2008, pp. 12.

12) 『北 나선상품전시회 개막...미국 등 120개 회사 참가』, SBS, 2013년 8월 19일 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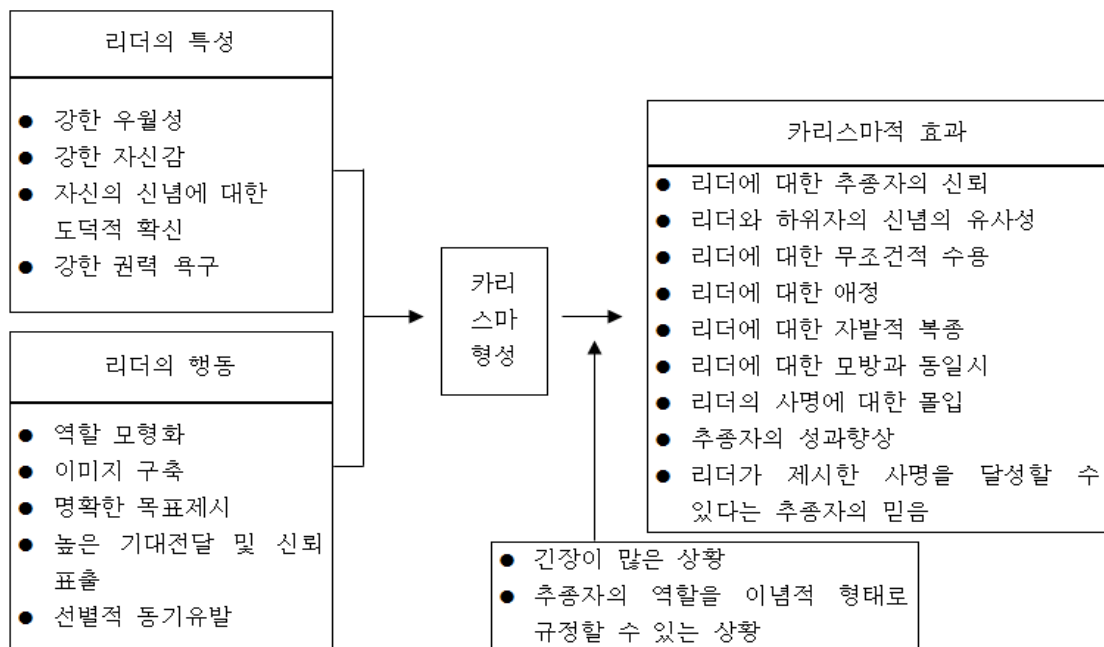
13) “北·中, 개성~평양~신의주 고속도·고속鐵 계약”, 『조선일보』, 2013.12.12, 4면.

제4장.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 분석

1. 김정은 개인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연구는 막스 베버(M.Weber)에 의해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하우스(House)에 의해 확장되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 연구되고 있다. 막스 베버는 카리스마를 개인의 예외적인 자질에서 출발 한다¹⁴⁾고 설명했다. 그는 하급자들이 리더를 신이 부여한 능력이나 신비적 재능을 부여받은 천부적인 존재로 느끼게 됨으로써 믿고 따르게 될 때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베버(M.Weber)가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한 접근방법에서 카리스마 리더의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한 반면, 하우스(House)는 베버의 이론을 관계 지향적으로 확장시켜 카리스마 리더십을 리더의 특성과 행동의 차이점에서 설명하였다¹⁵⁾.

〈그림 - 1〉 House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모델



(그림-1) : House, R. J(1977), A 1976 Theory of Charismatic Leadership. in Hunt, J. G and Larson, L. L. (Eds). Leadership: The Cutting Edge,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강안나(2009). 카리스마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간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p. 9에서 재인용.

하우스(House)의 이론을 카리스마 리더의 행동방식, 카리스마 리더의 특성과 기술,

14) Weber, M. 1947.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Edited by T. Person: trans by A. M. Henderson & T. Person, New York : The Free Press.

15) House, R. J. 1977. "Theory of charismatic leadership" in Hunt, J. G & Larson, L. L. (eds), Leadership : The Cutting Edge.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p.208.

카리스마 리더가 출현할 가능성과 조건, 카리스마 효과와 관계를 〈그림-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하우스에 의하면 카리스마적 리더는 권력에 대한 강한 욕구, 강한 자신감, 자신의 믿음과 이상에 있어 강한 신념을 가진다. 권력에 대한 강한 욕구는 리더가 부하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시키고 자신감과 강한 신념은 리더를 판단함에 있어 부하의 신뢰를 증가시킨다.

김정은이 북한의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임을 감안할 때 김정은의 특성과 정치행보는 김정은의 카리스마 형성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준거(準據)가 된다. 김정은을 북한의 리더로 간주하고 리더의 특성(그림-1)을 대입해 볼 때 수령 혈통을 강조하는 북한에서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의 혈통인 것 자체가 우월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군과 민간의 시찰과정에서의 스킨십 제스처, 어머니 고영희¹⁶⁾에 대한 우상화 선전, 부인 이설주의 공개는 김정은이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정치행보를 볼 때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역할 모형화(模型化)를 통한 우상화 선전으로 김정은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핵·경제병진 노선의 명확한 목표 제시는 북한 주민들에게 일말의 기대감 조성으로 선별적 동기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특히 김정은의 지배엘리트층에 대한 신뢰와 포섭은 자신의 카리스마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우스는 이렇게 형성된 리더의 카리스마가 위기와 추종자의 역할이라는 조건을 만날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북한은 김정은과 공생의 상하관계 안에서 암묵적인 거래적 교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수의 지배엘리트 층과 대다수의 최하위 빈민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충성심을 기반으로 하는 복종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배금주의가 사회적으로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위기로 부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김정은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

정권의 리더십은 국가 리더십을 함의하고 있다. 국가 리더십은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 국제사회의 신뢰와 국민들로부터의 지지가 그것이다. 한 국가가 국제사회로부터의 정치적 신뢰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경제적 신용을 바탕으로 자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면 국가 리더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은 체제 출범 이후 대내외적 정책행보와 북한의 체제모형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 후크(Hook)는 역사적 흐름에 대한 지도자들의 태도와 대응 방식에 따라 체제모형을 대세주도형(event-making man)과 대세편승형(eventful man)으로 구분하였다. 후크는 대세주도형은 자신만의 특출한 판단력과 의지로 상황의 전개과정을 주도해 가는 반면, 대세편승형은 자신의 역할을 시대적 추세에 적응해 가는 유형

16) “北,김정은 어머니 고영희 묘비명은 ‘고영희’”, 연합뉴스, 2012. 8. 2일자.

이라고 정리했다¹⁷⁾. 현시점에서 김정은 정권은 대외적으로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으며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의 호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제적으로는 개혁과 개방의 압력이 들어오고, 국내적으로는 시장경제가 팽창하고, 핸드폰의 보급으로 상·중·하층 간에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의 변화 없이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음을 모를리 없다. 김정은 정권의 핵·경제 병진 노선, 6.28경제개선조치 등 다양한 경제적 구조의 변화들과 정책행보·체제모델을 종합해 볼 때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은 대세편승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외부세계에 대대적인 언론 공개를 통하여 체제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화의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사회주의체제 모델을 유지하고 있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북한경제의 실정에서 개혁을 동반한 변화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모든 것을 국가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북한의 실정에서 자국민들의 먹는 문제와 물질, 문화적 수준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지난 2009년 ‘화폐개혁’ 때처럼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 수령에 대한 충성심마저 회수하게 된다. 지난 12일 장성태과 그 측근들을 숙청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북중관계를 이끌어 내려 하지만 이러한 공포정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민심의 이반과 동시에 정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친중파로 알려진 장성택의 처형은 앞으로의 북·중 관계에서 개혁·개방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러한 압박은 북한 정권이 대세에 편승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17) 김도중, “정치리더십 연구회 현황과 과제”, 『이순신연구논총』, 2004, p. 342.

제5장. 김정은 정권의 변화 가능성

1. 리더십을 통해 본 변화 가능성

김정은의 리더십과 김정은 정권의 변화 가능성은 상호적 연관관계에 있다. 따라서 검증과정에 있는 김정은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김정은 정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김정은 정권의 변화 가능성은 형성과정에 있는 김정은의 카리스마 리더십과 카리스마적 효과 사이에 미치게 되는 상황변수에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상황변수라 함은 형성된 카리스마가 효과를 보기위해 극복해야만 하는 위기와 추종자의 역할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에서 상황변수는 경제난과 식량난과 같은 위기와 국민들로부터의 지지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은 외부의 지원 없이 공급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내부자원 동원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경제를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는 개방, 내부적으로는 개혁이 필요하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리더십이 북한 체제의 변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영역에서, 얼마만큼의 변화를 유도할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향배는 북한 체제의 “구조 안에서의 변화”를 주도하느냐 아니면, “구조 자체의 변화”를 모색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①북한체제의 “구조 안에서의 변화”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유일지도체제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제부문에서의 부분적 개방을 모색하는 것이다. 경제부문에서의 부분적 개방이라고 할 때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위주로 하면서 외국기업을 유치해 경제발전과 기반산업을 확충하면서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고,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② “구조 자체의 변화”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제부문에서의 개방을 시작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또한 주민시장의 확대와 개인재산의 사유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정치사회부문에서 일당제의 원칙에서 부분적으로 민주주의를 수용¹⁸⁾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김정은 체제의 유일체제는 유지하겠지만 경제난에서의 탈피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북한의 기반시설이 미비한 것도 있지만 핵개발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투자여건의 불투명으로 이어져 외국투자자들의 투자실적 저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아무리 어려운 경제적 빈곤과 식량난을 겪더라도 체제의 생존과 안정에 위해가 되는 ‘핵(미사일 시험발사) 포기’를 선택할 수 없다. 후자의 경우는 경제난과 식량문제는 해결되어 국민생활은 나아질지 모르나 김정은 정권의 안정은 기약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제개방에 따른 시장의 자율화는 자본주의 문화의 수입과 수용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 후자의 변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18) 부분적 민주주의의 수용: 사조직의 허용이라고 볼 수 있다. 사조직이라 함은 최소한의 대중단체를 들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와 각종 친목, 동문, 동호회 등과 같은 사회단체 결성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는 체제안정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전자의 입장에서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북한 내부 요인을 통한 변화 가능성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또 하나의 난제는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북한의 내부정세이다. 얼마 전 한 언론사 신문에 북한에 휴대전화 가입자가 지난 4월 200만을 넘었다는 기사가 소개되었다¹⁹⁾. 북한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국민을 2300만명으로 볼 때 12명 당 한 대 꼴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휴대전화의 확산은 정보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는 개인 소유의 격차를 가져다주는데 이는 시장경제(암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거의 모든 공장들이 문을 닫은 지 오래된 북한에서 암시장의 활성화는 자본주의 문화와 상품의 유일한 창구가 되고 있다. 사상강국을 주창하는 북한에서 주민들의 충성심리가 소멸되어가고 물질만능주의가 국민정서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말이나 행동에서 항상 조심하고 정부의 규제와 통제에 고분고분하던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것은 북한 주민의 민심이 북한당국을 떠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정치범들을 제외한 중·경범죄는 돈만 있으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고, 중·소도시까지 성매매와 가정부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한류의 전파는 DVD에서 CD로, MP3의 확대와 USB의 보급으로 견잡을 수 없게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주민사회의 변화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통제 불능에 가까운 시점에 있다.

그러나 지배엘리트층의 사상동향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북한의 지배엘리트들은 후계구축 과정에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안정 추구를 위해 3대 세습에 동의하고 적극적인 거래적 공모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지배엘리트층이 통제 시스템(System)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가로 부귀를 보장받고 있으므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도전이나 불충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없어 보인다. 김정은이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군림하면서 군주국가의 권력구조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군·당 관료 간에 사소한 의견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대립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지배엘리트층과 김정은의 거래적 협력관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며 과거에 비해 좀 더 폭압적인 정책으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김정은 우상화 선전을 바탕으로 체제결속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사회적으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배엘리트 층의 공모가 있는 한 김정은에 의한 북한체제관리는 가능하다고 본다.

19) 『남북의 창』, KBS 1, “北 정보 통신, 개혁·개방 이끌 수 있나?”, 2013년 9월 28일 방영.

3. 북한 외부 요인을 통한 변화 가능성

오늘 날 동아시아 지역의 역학구도는 미국주도의 단일·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이다²⁰⁾. 초강대국인 미국이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등의 묶인과 협조를 얻어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체제이다²¹⁾.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의 영향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되면 될수록 미국이 동북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실어주기 때문에 결코 묵인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최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도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령은 러시아 국민과 기관, 기업체들이 북한 상품을 교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²²⁾’ 하였다.

지난 12월 12일 북한이 발표한 장성택 처형 보도와 관련하여 美·中·日 지도부가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가 동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양국간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 해군이 며칠째 북한 옆 발해만과 서해에서 벌이는 군사훈련을 2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²³⁾. 더욱이 친중파로 알려진 장성택의 처형은 북·중 경제협력에도 당분간 부정적인 영향²⁴⁾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이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식량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경제재건 뿐 아니라 주민생활향상도 기약할 수 없다. 특히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자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마지막 출로이다. 그러므로 외부의 식량지원이 없이는 자국 내 곡물가의 안정과 암시장의 유통을 통제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들어서면서 핵·경제 병진 노선의 배경에는 핵카드를 이용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하여 대화를 주도하고, 그대가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며, 자국 내 국민의 민심과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중국을 포함한 대외관계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 김강녕, “동아시아 정세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대응방향”, 『코리아정책저널』, (13. 01/02): 15-16.

21) 황병무, “동북아 안보환경의 평가 전망”, 『월간 군사세계』, (05. 05): p. 50.

22) 유세진, “러시아, 북한에 경제제재 부과 … 북한 상품 교역 및 북한과의 금융거래 금지”, 뉴시스, 2013. 12. 3,

23) 최승규, “[TV조선 특보] 美·中·日 북한 정보 수집 총력”, 2013. 12. 14,

24) “중국 지도부 충격 … 북 도발 땀 강력한 제재 나설 것”, 『조선일보』, 2013.12.14.일자, 6면.

제6장. 결론

북한 정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김정은 유일체제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데 최종 목적을 두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주창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을 향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북한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을 포함한 6자 회담 당사국들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정치적 압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난제와 주민의식의 개방화라는 안팎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고립되고 내부의 불안정이 심화되어 정권유지가 어려워 질 수 있다²⁵⁾. 특히 북한 내부에서의 장성택 숙청은 김정은 정권의 유일체제의 강건함 보다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이 장성택에게 적용한 ‘국가전복음모’ 죄라는 죄목과 함께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한 것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 엘리트층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그럴 수 있다(쿠테타도 있을 것)는 가능성을 시사해준 계기도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체계적인 정부통제시스템²⁶⁾(Governmental Control System)을 갖춘 크로스 체크 시스템(cross checking system)으로 최소한의 주민통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크로스 체크 시스템은 당조직, 국가보위부, 인민보안부를 축으로 3개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주민동향을 파악해 김정은에게 집적 보고되는 체계이다. 또한 북한의 지배엘리트들이 김정은의 후계구축 과정에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신변안정을 위해 3대 세습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북한의 크로스 체크 시스템과 지배 권력층의 동조는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2013년 들어서면서 핵·경제 병진 노선의 배경에는 핵카드를 이용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하여 대화를 주도하고, 그대가로 경제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자국 내 국민의 민심과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다. 이것은 북한의 안보위협과 ‘남북경제협력’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함을 함의하고 있다. 과거 북한이 남북문제에 있어서 대화와 도발을 병행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포리부동한 정책을 유지해 왔듯이, 김정은 정권 역시 같은 패턴(Pattern)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대외정책으로써 6자 회담 당사국들과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추가로 4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높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체제보존을 위하여 핵 포기는 불가능하며, 남북한 군사적 긴장화는 전술적 차원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과거 김정일 정권의 유지보존에 중점을 두고 정치, 경제부문에서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변화를 모색할 것이나 김정은 유일체제라는 정치적인 면에서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5) 남광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박근혜 정부의 출범”, 『코리아정책저널』, (13. 01/02): p. 43.

26) 국가 통제 기관(Governmental Control System) : 당 조직, 국가보위부, 인민보안부, 기층조직(직맹, 농근맹, 여맹, 사로청 등)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이상우, 『북한정치 ‘신체제의 진화와 작동원리’』, 서울: 나남출판사, 2008.
- 최완규,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 서울: 한울, 2001.
- 이영중, 『후계자 김정은』, 서울: 늘품플러스, 2010.
- 고유한, “김정은 후계구축과 북한 리더십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45호, 2011, p. 5.
- 김도중, “정치리더십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순신연구논총』, 3호, 2004, pp. 2.
- 황병무, “동북아 안보환경의 평가 전망”, 『월간군사세계』, 50호, 2005.
- 김강녕, “동아시아 정세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대응방향”, 『코리아정책저널』, 16호, 2013, pp. 15-16.
- 남광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박근혜 정부의 출범”, 『코리아정책저널』, 16호, 2013, pp. 43.
- 정대창, 『북한 3대 세습 정권승계 과정 분석과 전망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강안나, 『카리스마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간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9.
- 조선일보, “중국 지도부 충격 … 북 도발 땀 강력한 제재 나설 것”, 2013.12.14.일자, 6면.
- 조선일보, 김정은 집권 2년 만에 혁명세대 다 내쳐, 2013년 12월 4일 수요일, 안준호·박수찬 기자
- 조선일보, “北·中, 개성~평양~신의주 고속道·고속鐵 계약”, 2013.12.12.일자, 4면.
- “남북의 창”, KBS 1, 『北 정보 통신, 개혁·개방 이끌 수 있나?』, 2013년 9월 28일 방영.
- “남북의 창”, KBS 1, 『北 나선상품전시회 개막…미국 등 120개 회사 참가.』, 2013년 9월 28일 방영.
- “北 나선상품전시회 개막…미국 등 120개 회사 참가”, SBS, 『뉴스』, 2013년 8월 19일 방영.
- 이충현, “北,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 명기(종합)”, 연합뉴스, 서울, 2012. 5. naver. com /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001&aid=0005631716>.
- 유세진, “러시아, 북한에 경제제재 부과 … 북한 상품 교역 및 북한과의 금융거래 금지”, 뉴시스, 2013. 12. 3. <http://www.newsis.com/ardetail/view.html? ar_id=NISX20131203_0012560724&cID=10105&pID=10100>
- 김종현, “北, 김정은 어머니 고영희 묘비명은 ‘고용희’”, 연합뉴스, 2012. 8.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005735905>>

2. 외국문헌

- House, R. J., "Theory of charismatic leadership" in Hunt, J. G. & Larson, L. L. (eds), Leadership: The Cutting Edge,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77.
- Weber, M.,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Edited by T. Person :trans by A. M. Henderson & T. Person, New York: The Free Press, 1977.

<통일UCC 부문 우수상>

덧셈

$$1+1=\infty$$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이범중

꽃제비의 쩡그린 얼굴, “우린 김정일 동지 덕에 우유를 하루 한 잔이나 마신다”고 자랑하는 소녀, 관광객에게 구걸하는 북한군, “북핵은 우리 것 아니냐”는 어느 한국 학생의 궤변.

20대에게 통일은 무엇일까? 한국전 이후, 세월의 포탄이 이산가족을 줄이고 있다. 당사자와 언론을 빼면, 사실상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우린 이미 섬나라 사고방식에 익숙하다. 부산에서 철길로 유라시아 횡단할 생각을 못 하는 세대이다. 어느새 통일은 그저 땅과 땅이 만나거나, 독일보다 준비가 덜 되었다거나, 쏟을 돈이 없다는, 관념 속 무언가가 되어버렸다.

구름을 눈으로 만들고 싶었다. 단순히 덧대는 게 아니고, 당장의 손해만을 생각할 일이 아니며, 전혀 새로운 생활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설렘을.

지난해 이맘때 방영된 Apple의 iPhone 5 광고 ‘물리의 법칙’ 편을 패러디했다. 화면이 길어지고 속도가 빨라졌는데, 오히려 얇고 가벼워졌다는 점을 응용했다.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가 치열하다. 통일은 숫자적으로 계산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다. 수학의 1 더하기 1과 통일의 1 더하기 1은 결코 같지 않다.

우린 하나였습니다

경민대학교 임지섭
삼육대학교 박정주
서일대학교 남 준

먼저 통일이라는 주제는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기본으로 구상해 나갔다. 답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통일의 이유로 경제적 성장, 국방비 절감 같은 이유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보고 싶었다.

이번 UCC를 제작하면서 다시 한 번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사실 공모전을 준비하기 전까지 통일문제에 대해 무관심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UCC를 준비하며 같이 준비하는 팀원들 간에 통일에 대한 생각도 나누어 보면서 통일에 대한 서로의 생각도 들어보는 사이 어느새 통일문제에 많은 관심이 생겼음을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상으로 통일이 멀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사실 중고등학교를 거쳐 현재의 대학 생활에 이르기까지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 올바른 통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이 통일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얻고, 또 함께 이를 나눌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의 소원

한림대학교 장원석
강원대학교 신예찬

이 UCC를 통해 가장 알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분단되었는지 이다. 요즘 어린 세대들은 무엇 때문에 분단이 일어났는지,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는 이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신이 사는 나라의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세대들에게 우리가 분단된 이유, 더 나아가서 통일되어야 하는 이유를 감정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보고자 하였다.

제작에 있어서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식채널을 패러디하였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매개체는 SNS이다. 요즘 SNS에서 지식채널과 같은 방식은 사진과 간단한 글귀들로 이루어진 영상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지식채널을 패러디하였다. 이런 매개체를 이용한다면 무거운 주제로 여겨졌던 통일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통일이란, 사실 분단의 아픔을 겪지 못한 세대에게는 인색한 단어일지 모른다. 하지만 비록 작디작은 노력이지만 이번 계기를 통하여 현재의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